기본소득

2019 여름

창간호 #001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1

|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
| 발행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 편집위원장: 백승호 |
|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
| 편집디자인: 사과나무 |
| https://basicincomekorea.org |
| basicincomekorea@gmail.com |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2019 여름 창간호 #001

CONTENTS

들어가며	04	창간에 부치는 글 _ 백승호
	06	창간 축하메시지 _ 홍세화 등
이 계절의 이슈 : 기본소득 되돌아보기	18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 _ 금민
	24	**왜, 다시 기본소득을 말하려고 하는가?** _ 이지은
화제의 인물 인터뷰	28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 세상의 꿈, 기본소득에서 찾다** _ 인터뷰어 오준호
	34	[강남훈 대표] **혁명은 종이 위에서 시작된다** _ 인터뷰어 오준호
문학	41	[시] 거북이 날다 _ 문정희
	42	[시] 나날들 _ 나희덕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44	**임박한 파국과 기본소득이라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_ 류보선
동향	54	[학술 동향]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_ 권정임
	60	[현장스케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 '국제컨퍼런스'를 중심으로** _ 이관형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66	기본소득, 누구나에게 버팀목과 시작일 수 있길 _ 김민정
	68	기본소득과 나 _ 이선배
QnA 오해와 이해	70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_ 김교성

기본소득 시대는 소리없이 새벽처럼 찾아올 필연입니다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기본소득 시대는 소리없이 새벽처럼 찾아올 필연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혹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혹자는 새로운 직무의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고숙련의 일자리와 기계로 대신하기에는 너무 싼 일자리만 사람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불안정한 노동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필연일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배당의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연적인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산업자본주의의 가치생산이 노동력과 모두의 것이었던 토지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재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가치생산은 가상의 토지인 인터넷에서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기원합니다. 빅데이터 역시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에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분배방식의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분배정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정의이자 역사적 필연인 기본소득의 실현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노예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줄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노예노동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생산활동 뿐 아니라, 정치활동, 시민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환경보호활동 등 인간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켜줄 다중 활동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소득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중립적인 우파적 기본소득에서부터, 인간의 해방을 위한 좌파적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본소득을 실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복지국가의 모습이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까지 다양하게 분기되었듯이,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도 그러할 것입니다. 공유부배당의 정의 실현과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인간해방을 위한 공유부배당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에 더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계간 『기본소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회원들 및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어떤 기본소득을 지향할 것인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계간 『기본소득』에 담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절의 이슈: 기본소득 되돌아보기] 코너에서는 계간 『기본소득』의 기획주제가 담깁니다. 기본소득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기본소득 실현의 전략과 전술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기본소득이 인간해방을 위한 진정한 기본소득이기 위한 우리안의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화제의 인물 인터뷰] 코너는 기본소득 실천운동 과정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면, [나에게 기본소득이란]은 일상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간입니다.

[문학] 코너와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코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근의 문화적 실천들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문화시평'이며, 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 운동과 문화적 실천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작업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동향] 코너는 주로 학술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을 소개하거나,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모임 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QnA 오해와 이해] 코너는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의문들, 오해들을 드러내고 이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부족한 부분들, 더 담아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언제든 제안을 환영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기본소득 실천과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문학계 소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축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편집위원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간 『기본소득』에 화룡점정과 날개를 달아주신 이명재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간 『기본소득』 디자인과 편집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긴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대표

<기본소득> 계간지가 출범하는군요. 한 점의 침전도 없는 해맑은 심정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4년 여 전부터 어쭙잖게 장발장은행장이 되어 벌금형을 받은 한국의 장발장들의 처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장발장'이란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노역으로 환형 유치되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벌금 기백만 원이 수중에 없고 친구나 친척에게서 빌리기도 어려워 자유를 빼앗기는 동시대인이 최근까지 매년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중에 집안에 돌봐야 할 어르신이 있거나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이른바 '몸빵'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4년여 동안 장발장은행은 7백여 명에게 평균 180만 원 가량 대출해주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신청을 받아 그분들의 형편을 살필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다음의 가정을 해보곤 합니다. "3년 전부터 이 분의 가족 한 사람 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하는 습관을 수년 전에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던 송파 세 모녀의 사연을 접한 뒤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아래였다면 송파 세 모녀가 지금도 잘 살고 있으리란 생각과 마찬가지로 벌금수형자들도 그 대부분은 이미 수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애당초 생계형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둘째, 결핍상태의 지속,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스트레스에 쫓기며 살지 않으므로 단순폭행 같은 돌발적인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를 가정한 것은 기본소득의 지속성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한 사람당 30만 원을 가정한 것은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그 재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안은 인간 영혼을 잠식한다"는 명제를 프랑스에서 정치적 난민의 처지에 있을 때 실감했습니다. "왜 우유 안 사?" 지금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는, 당시 일곱 살이었던 딸의 물음이었습니다. 수중에 우유를 살 돈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지요. 난민으로 살던 초기에는 집세 걱정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은 제 영혼을 짓눌렀는데 그런 물질적 불안을 적잖이 줄여준 게 프랑스의 가족수당, 주거수당제도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기본소득에 강한 친화력을 갖게 했습니다. 제게 기본소득은 그 어떤 주장, 그 어떤 논리에 앞서, 인간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을 덜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귀한 의제이며 기필코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부는 "정치는 본디 고귀한 것이다.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그 기본소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도 기본소득을 알았더라면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인민의 소박한 열망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냉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공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저도 앞으로 나올 <기본소득>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시금 <기본소득>의 창간을 감사의 마음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크게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모두들 외면했지만, 근래에는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얼마나 낭비적인가를 지적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끄덕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들은 기술진보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존속되는 한 시장의 힘도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세가 합세하면 대량실업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대량실업이라고 하면 흔히 대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소득은 대량실업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기계가 본격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의 시대"가 옵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소득보전이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기본소득의 실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에 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넓게 그리고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얘기하면 으레 나오는 반응은, 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구시대 규범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노동자 대신 생산현장에 투입된 인공지능 로봇과 기계가 쏟아내는 그 엄청난 물량의 상품을 어떻게 팔리게 할 것인가 입니다. 과거에는 그 대부분을 노동자가 월급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대신 생산에 투입된 인공지능 로봇과 기계는 월급을 받지도 않고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이 생산한 그 많은 상품을 사줄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공돈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돈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나오는 또 하나의 반응은, 공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하거나 할 일 없이 빈둥대면서 소일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입니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간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반박을 받기도 하고, 근거가 없다는 학자들의 비판도 받습니다. 생계 걱정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냥 빈둥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생활개선, 건강, 자녀교육 등의 분야에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수많은 기본소득 실시 사례에서 밝혀졌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현실적인 질문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고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런 각종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나아가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공정한 세상의 초석이 되길

기본소득은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희구와 신념에서 결행한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은 2019년 오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손잡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우리는 대동세상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결합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양극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지양을 지향합니다. 지역화폐는 사라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지역화폐는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편기본소득의 실현을 오히려 앞당길 것입니다. '재분배의 역설', '부자의 역설' 등과 더불어, 저는 '지역화폐의 역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분들과도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창간하는 계간 『기본소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전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거짓 희망을 공급하는 서사, 그보다 나은 것은 정직하게 절망하는 서사, 최고의 것은 끝내 희망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내는 서사, 라고 말입니다. 근거 있는 희망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운동이 우리에게 '근거 있는 희망'의 서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계간 『기본소득』이 그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작가

4차 산업혁명, AI, 자동화... 방법은 정말 각자도생 뿐일까?
'헬조선'을 함께 건널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상상력.
지금 이 고민과 질문이 고맙고 든든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입니다.

과거에는 불안정노동자를 해고와 실업을 반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한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접속은 해있어야 일감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해놓고 생존해야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성적 실업자들과 잉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파든 좌파든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랫폼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잉여들이 핸드폰값은 낼 수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고, 데이터를 매개로 실시간으로 구인 구직 업무지시와 해고 가장 중요하게는 데이터 축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플랫폼자본주의 생태계의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소득이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각종 수당정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원칙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산안법개정안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추적은 맑스이래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 농민과 노예들의 반란은 사회의 부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물었던 행위였습니다. 플랫폼자본주의 시대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회사들에게 물을려고 합니다. 플랫폼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본소득은 이에 대해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갈 기본소득 계간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문재
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딸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삶의 방식에서 천지자연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다.

인류 탄생 이래 유례가 없는 이 '거대한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기성세대가 미래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라는 미명 하에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아온 것이다. 하루빨리 돌려줘야 한다. 미래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공멸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비상구가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회복된다. 그래야 노인과 어린이도 살아난다. 이제 시작이고 갈 길 또한 멀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전 인류가 기본소득을 받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지속가능한 인류세'는 그때 열릴 것이다.

기본소득이 마지막 미래다. 우리가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물려줘야 한다. 최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공동 창립자

번역 _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Korea is an extraordinary country that does not do things by halves. After the devastating war in the early 1950s that split the country into two, the Republic has displayed a remarkable determination in rebuilding its economy, which is now the tenth largest in the world. Its average income per head is ninety per cent of that of its near large neighbour, Japan, and it has a reputation for the quality of its output. The economic success has come at a social cost, since it has become realised that the average income per head masks a wide distribution in which a significant proportion of its population is living in poverty. It is time to ask 'Who is the economy for?' Globalis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mean that working for pay is no longer the main route out of poverty and new avenues have to be explored.

However, Korean vision and determination has come to the fore again, in no mean part due to enthusiasm and hard work of the Basic Income Korean Network pointing the way to the solution. Thanks to BI-KN and the capacity for vision and leadership of Governor Lee Jae-Myung of Gyeonggi Province, and to other advocates of basic income among researchers, opinion formers, policy-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a wonderful transformation is taking pla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Dividend for all of the 175,000 young people aged 24-years old in Gyeonggi Province. This makes it one of the largest basic income projects in the world, after the Alaskan Permanent Fund Dividend. However, the fact that it will be rolled out to cover more young people in the next few years, and that Korea is in the influential position of being the country in East Asia, to which so many other countries look for solutions, means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your part of the world. As the beneficial outcomes of the Youth Dividend become obvious to see, a wave of basic income projects throughout East Asia could lead the whole area being transformed, heralding a new era of justice, peace and welfare for all.

Congratulations to BIKN, and to its new online magazine, the Basic Income Quarterly, which will be able to track the changes as they occur and report them for all to read. It will be able to put forward

counter arguments to those whose remain sceptical. More importantly, it will be able to provide the narratives and personal stories of the people to whom this will have made a difference, which are the true outcomes of this amazing project. Well done, Basic Income Korean Network!

(필자와의 협의하에 한국어 번역은 축약본으로 게재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가가 있는 일이었고, 이로 인해 이제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임금 노동은 더 이상 빈곤에서 탈출하는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인들의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다시 한 번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도 이재명 지사, 정책 입안자, 일반 시민 모두의 노력 속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인 청년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한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새로운 온라인 잡지, 계간 『기본소득』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 잡지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추적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잡지는 여전히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적절한 논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잡지가 변화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놀라운 프로젝트의 진정한 결과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EC 부의장

The ultimate goal of all knowledge is to help us evolve as better human beings and build a better society.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is known for several initiatives in its journey of ten years. It has organised the first BIEN Congress in Asia. It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policy advocacy of basic income which is exemplified by the launch of Youth Dividend in Gyeonggi province.

And here comes one more initiative- the launch of the Basic Income Quarterly. On behalf of Basic Income Earth Network,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BIKN on this occasion. This initiative is timely and the need of the hour. At a time when basic income has become a serious policy alternative across continents, it is important to initiate, promote and build basic income literature locally in order to develop and expand a critical community that understands, appreciates and advocates basic income. And this initiative I am sure is also one of the first in the Asian countries. I wish all the members of BIKN all success.

번역 _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진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지난 십 년 간의 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아시아 최초로 BIEN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실시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 정책을 하는 데 선두에 섰습니다.

이제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이라는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대신하여 이 일을 축하합니다. 이 활동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진지한 정책 대안이 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비판적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서 기본소득 문헌을 창간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일은 분명 아시아 나라들에서 최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모두에게 성공을 빕니다.

김수연
기본소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이라는 낯선 개념이 청년수당,청년배당,농민수당 등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각종 수당 정책으로 구현되는 기본소득은 '취직 안되는 불쌍한 청년들'에게 '혁신과 창조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모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당한 몫을 가질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본래 이상에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산 심사 없이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보장을 비롯한 인간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게 안전판이 되어줄 기본소득은 동정과 시혜,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기본소득으로 펼칠 수 있는 상상에 날개를 달아줄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이 더욱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나명주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학입시에 매진하라고 채찍을 휘두르는 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들이 경쟁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꿈과 행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출발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계간지 창간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공론화 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스밀라
BIYN

계간 기본소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유럽의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기본소득 뉴스'를 발행한 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런 멋진 매체를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계간 기본소득이 생긴다고 하니 더욱 기쁩니다.
계간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진 풍성함과 상상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김주온
BIYN

계간 『기본소득』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여러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계간 『기본소득』을 통해 앞으로 더욱 깊이있는 논의가 오가고, 멀리까지 가닿기를 기대합니다.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기본소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르지만 의도는 서로 다르죠. 따라서 불을 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계간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한 불빛 아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됩니다. 응원합니다.

박용현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대표

2003년 시작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가 어느덧 2019년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학생들의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미래가 불안정해 그 길을 계간 『기본소득』이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정
기본소득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많은 경우 그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상관없이 기승전'기본소득'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이면 OK, 여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전제된 새로운 '오늘'에 대한 상상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과 시작이라 생각하니까요.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버팀목과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재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고문,
전주화평교회 목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정보와 실천소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계간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한 일은 참으로 잘 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한지도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세미나와 독서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무크지가 발간되면 한국에서 우리의 운동이 더 논리정연한 이론을 갖추게 되고 각 지역단위의 활동소식을 더 활발히 교류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조직활동을 벗어나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민민의 자발적 요구들을 더 잘 수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촘촘한 네트워크로 온 세계의 국민들과 뜻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가의 계급적 한계와 국경선을 가로 지르는 차세대의 평화혁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계간지의 발간을 학수고대하며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기본소득과 함께 할 다른 미래를 상상합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한다면, 불안한 내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운동의 소식을 계간으로 널리 알려, 기본소득이 보편적 의제로 퍼지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 **안영빈** 기본소득신진연구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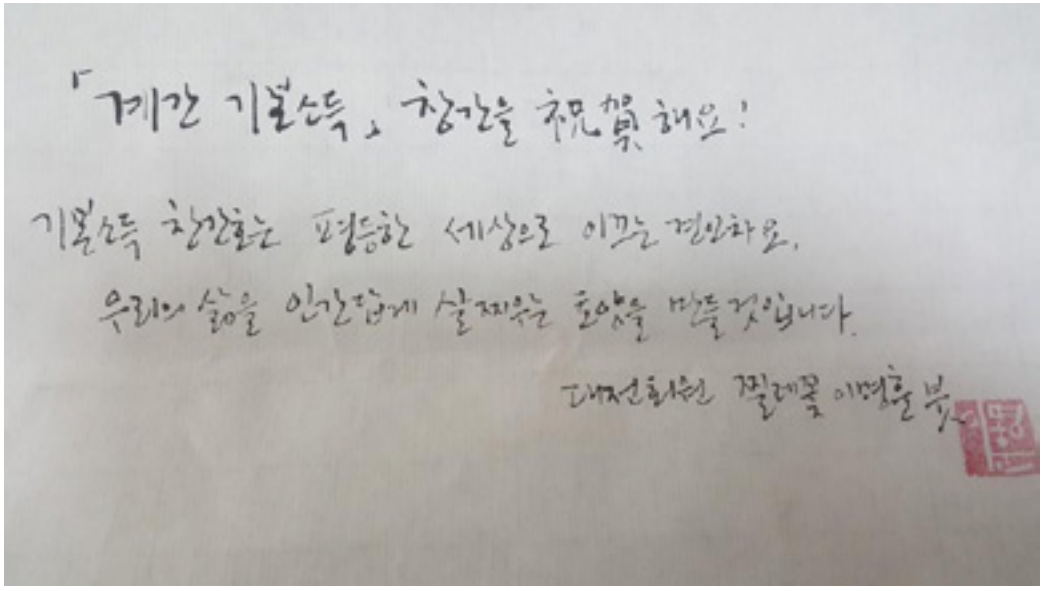
공부하고 싶으면 원대로 할 수 있고, 아파도 돈 걱정 없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기본소득'을 처음 알게 되었다. 놀라움, 반가움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 되었는데 이젠 '기본소득 전문지'를 만날 수 있다니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계간 『기본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상상이 실현되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지속해주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처음 기본소득을 알게 된 나날들, 기득권과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민을 꿈꿨습니다. 지금은 기본소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정치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모두의 꿈은 같은 듯 다를 것입니다. 노동은, 정치는, 복지는, 지역은, 지구는 기본소득으로 어떤 미래를 당길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할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축하 드립니다. 다양한 관점과 뜨거운 토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시민에게 권력을!"

- **고은영** (기본소득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녹색당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



좋은 계절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니 든든할 따름입니다. 머지않은 기본소득의 계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널리 전하겠습니다.

- **손상우**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느낌으로 축하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짱면처럼, 김치찌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제대로 알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서희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박은영)

기본소득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보다 많은 다양한 내용을 접할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진우)

상호 신뢰가 깊어가는 사회를 향한 긴 호흡 강한 걸음 (김명수)

온국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날까지 화이팅~~!! (이진호)

기본소득 창간 축하드립니다. (유영민)

국민배당!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인 것 같아요.
애쓰시는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잡지 창간 좋은 자료들 쌓일 테니 또 즐겁습니다.
피디에프형식의 잡지라니 더 좋네요. 다시 고맙습니다. (앗쭈)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완전기본소득 나라가 됩시다. (김찬휘)

계간 『기본소득』 창간을 축하합니다.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계간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속에 나와 이웃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을 적극 응원합니다!!!
- 손정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복지사

기본소득은 인간자유의 문제다!
인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기본소득), 양 날개를 달아야 완벽해진다!
- **임언철**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가자가자 (왕해전)

창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이 되는 기본소득 지급국가 되는 거 보고 가고 싶어요. (이창민)

계간 『기본소득』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해숙)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
계간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공정사회)

축하드립니다.
꼬박꼬박 챙겨보고 주위에 많이 소개할께요~ 화이팅!! (진형익)

이제 시작입니다. 계간 『기본소득』 화이팅! (길한샘)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본소득이 소득의 기본, 우리 사회의 기본으로 자리하는 데
계간 『기본소득』이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이종춘)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이러한 정의는 기본소득을 다른 종류의 복지제도와 구별해 준다. '현금 이전'(cash payment)이라는 특성에 의해 기본소득은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며, 정기성은 성년에 도달할 때 일회적인 종자돈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와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드러내 준다. 기본소득 정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세 지표는 현존하는 복지국가의 공적 이전소득(public transfer income)과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지출은 '기여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한 축으로 하고 '필요의 원리'에 따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다른 한 축으로 하고 가계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노동요구나 노동할 의사에 대한 증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필요 여부를 가리는 자산 심사 없이 모두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핵심 지표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공적 이전소득 안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종차(種差, differentia specifica)를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보험이란 공공부조와 같은 다른 방식의 공적 이전소득과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부각되지만, 기본소득의 고유한 원천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현금이전이라는 특유한 분배방식 또는 이전방식으로서만 제시될 뿐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2019년 1월 26일의 정관개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제2조)이라고 정의한다. 기본소득을 정의하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분배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의 핵심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라는 점

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공유부는 기본소득의 원천을,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은 분배방식의 고유한 특징을 표현한다.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의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원천을 분명히 하면 분배방식에 대해서도 논리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공유부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지식,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특정 주체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즉 어떤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두의 몫이라는 점이야말로 공유부의 개념적 특징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유부의 분배에 조건을 달고 선별하는 것은 애초에 정당하지 않다. 누구의 몫으로도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몫으로 분배될 때에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원천을 공유부로 분명히 밝히면,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소득이전이라는 기본소득 특유의 분배방식은 원천에 적합한 유일한 분배방식이 된다. 공유부에 대해서는 기여에 따른 분배가 불가능하며 자산 심사에 따른 선별적 이전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것도 결코 정당하지 않다. 각자에게는 성과에 따라 분배하라는 분배 원칙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두의 몫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 공유부란 무엇인가?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

공유부의 종류는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공유부의 대표적인 예는 토지이다. 개간은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지만 개간에 의해 토지 그 자체가 창조된 것은 아니다. 토지 그 자체는 개간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두에게 속한다. 공유부배당론의 출발점인 토마스 페인은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동일한 논리를 펼친다. 페인은 개간을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시킨 사람들의 '인공적 소유'(artificial Property)와 토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보유하는 '자연적 소유'(natural property)를 구분하고 두 가지 소유권을 동시에 보장하려면 국가가 인공적 소유자의 수익 중의 일부를 거둬들여 자연적 소유자인 모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Paine, 1969[1796]1: 611). 우리는 동일한 논리를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한 '인공적 소유권'과 토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보유하는 원천적인 '자연적 소유권'을 동시에 보장하려면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이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배당해야 한다. 토지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사람의 '자연적 소유권'은 지대추구와 개발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제공한다. '자연적 소유'의 보장은 국가가 개발이득의 일부를 환수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의 연동, 또는 개발이득의 환수에 의한 기본소득 재원 조성과 같은 해별방식은 토지공유부에 대한 페인의 관점, 즉 인공적 소유와 자연적 소유라는 이중적 소유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토지정의』에서 페인은 '인공적 소유'가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번영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가 박탈된 다수 대중이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중적인 측면을 지적한다. 이중적 소유권론은 농업혁명과 함께 진행된 18세기 토지 인클로저(enclosure)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중적 소유권론은 한편으로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화를 해소한다.

자연적 공유부로는 토지공유부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나아가 생태환경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원래는 모든 사람 모두의 것이다.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은 천연자원의 수익을 모든 거주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한 첫 사례이다(Widerquist and Sheahen, 2012). 생태환경도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인류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생태환경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도 공유부로 보아야 한다.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 또는 생태배당의 연동 모델은 이와 같은 생태적 공유부 개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생태세 수입을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게 분배한다면, 생태세에 의해 자원절감기술의 발전을 강제하여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생태배당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생태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Schachtschneider, 2014: 14).

자연적 공유부가 원래 모두에게 속한 것이라면, 인공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식공유자산의 수익이다. 지식을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간주하면,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 2000)이 강조했듯이,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중의 일부를 과세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어야만 비로소 정의로운 분배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먼은 모든 소득의 최소한 70%는 세금으로 걷어 이 중에서 공공재정에 충당하고 남은 액수는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한다. 인공적 공유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통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4년에 이미 영국 경제학자 콜(G.D.H. Cole)은 "현재의 생산력은 현재의 노력과 사회적 유산의 공동결과(a joint result)"이며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공통유산(common heritage)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쓴다(Cole, 1944: 144).

나아가, 지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수익도 인공적 공유부라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자본이 디지털 기술회사로 몰려들면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발흥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시가총액 글로벌 5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정도로 커다란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인적 물적 자산이 투입보다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에 의해 수익을 얻는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로부터 나온다.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적 공유부의 분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토마스 페인의 토지공유부배당론은 18세기의 토지 인클로져를 배경으로 했다. 21세기 인클로져의 주요 대상은 토지가 아닌 데이터로 바뀌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라는 인공적 공유부를 배타적으로 전유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인프라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를만한 이와 같은 경향은 인공적 공유부의 분배정의를 이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3. 플랫폼 자본주의와 공유부배당의 현재성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의 소유자이다. 생산기업이 직접적 생산수단을 유지, 관리하듯이 플랫폼 기업도 플랫폼을 유지, 관리한다. 여기에서 플랫폼이란 두 개 이상의 다양한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뜻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플랫폼은 광고영업자와 기업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 유저를 플랫폼에 모이도록 하며 상호 연결한다. 비슷하게 우버는 운전자와 이용자를 플랫폼에 모으고 연결한다. 아마존과 지멘스는 기업들의 디지털 활동의 기반인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고 대여한다. 플랫폼 사업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끌어 모으고 이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용자 집단이 크면 클수록 직접•간접 네트워크 효과도 커진다. 즉 더 많은 사용자를 모을수록 이윤이 커져 가며 양면 시장에서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도 커진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이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데이터이다.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디지털 인프라이며 플랫폼 기업의 소유물이다. 플랫폼 기업의 이윤창출 메커니즘은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초자원으로 한다. 더 많은 데이터의 집적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며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킨다. 더 많은 데이터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수단이기도 하며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구글이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플랫폼 자본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면, 플랫폼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사람들을 연결하는가와 큰 상관성이 없다.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형태와 무관하며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확장될 수 있다. 데이터의 집적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전자결제 등 다방면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데이터의 추출과 이용이야말로 플랫폼의 고유 기능이며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Srnicek, 2017: 42-43).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도 핵심적 요소가 된다.

클라우트 컴퓨팅(cloud computing)의 등장과 심층학습(deep learning)은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선두에 서 도록 했다. 플랫폼 자본은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부터 서로 다른 그룹들을 연결시키는 전체 과정에서 모든 연결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위치에 있다. 자본주의의 현재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힘은 이러한 지위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지위는 자본주의의 미래, 곧 인공지능 혁명에 대해서도 플랫폼 기업의 우위를 보장해 준다. 플랫폼 자본의 경제적 비중의 증대와 미래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의 중심성(the centrality of data)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데이터를 가장 많이 집적하고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선두에 서게 되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산업자본주의와 달리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 수익을 공유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세밀하게 뜯어본다면, 네트워크 효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빅데이터이며, 만약 빅데이터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면, 플랫폼 자본의 수익에 대하여 전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한 플랫폼 자본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심층학습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알고리즘은 빅데이터 없이 개발될 수 없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의해 개발된 인공지능도 플랫폼에 의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개별적 생산기계에 적용된 개별적 인공지능과는 달리 플랫폼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매개하며 이러한 유형의 인공지능이 가동되려면 데이터의 수집은 항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공지능 역시 새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진화가 데이터의 수집에 의존하는 한에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배타적인 기여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각자에게 노동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곧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빅데이터에 대해 모든 사람의 원천적인 공동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플랫폼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

4. 공유부배당의 유형들

첫 번째는 조세기반 공유부배당이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은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의 연동 모델에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허버트 사이먼의 주장처럼 모든 소득에는 지식의 외부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소득세를 배당재원으로 할 수 있다. 조세형 공유부배당에서 중요한 점은 조세로 환수한 공유부는 거둔 액수 그대로 조건 없이 모든 개별적인 사회구성원에게 1/n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재정 특성은 국가당국의 정책적 고려와 무관하게 원래의 몫을 그대로 공유자 개개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록 공유부의 일부가 일반재정에 충용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충용되어 국가가 환수된 모든 공유부에 대해 재정적 재량권을 가

지게 되는 것은 공유부배당의 이념에 위배된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공유부배당에서 국가는 조세추출 기구로서 공유부를 환수하고 재분배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동소유권에 입각한 이용권 경매 모델이다. 페인의 동시대인인 토마스 스펜스(Spence, 1982[1797])는 페인의 조세형 모델에서는 지대 회수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토지를 공유로 돌리되 사적인 이용을 위해 7년 주기로 임대권 경매를 하여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당하자고 제안했다. 비록 수익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당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주파수 등은 이용 기간을 정해서 경매된다.

세 번째 유형은 공유지분권 모델이다. 이는 사회적 총자본의 일정 비율을 공유주식자본(Commons Capital Stock)으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사회배당(Social Dividend)을 실시하자는 제임스 미드(Meade, 1993[1964]: 63-4)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바루파키스(Varoufakis, 2016: 2) 등에 의해 여전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잎서 다루었듯이,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을 근거로 하는 플랫폼 공유지분권 모델은 매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공동소유형 배당이다. 공동소유권(common ownership)의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소유자이기에 수익을 조건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소유는 오늘날의 공기업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과 같은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와 전혀 다른 것이다. 공적 소유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고 수익의 분배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소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린 플랫폼(lean platform)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단순한 금지주의를 넘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소유형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유형을 택하든지 분배되는 것은 공유부이며 그렇기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인 분배방식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을 경합적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다.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형 기본소득을 일종의 디폴트값으로 둘 수 있다. 여기에 주파수 등에 대한 경매 모델과 결합된 보편적 사회배당, 나아가 공유지분권 모델과 공동소유형 공유부배당을 덧붙일 수 있다.

5.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이슈의 난점과 공유지분권 모델의 장점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은 빅데이터 공동소유자로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일정한 지분권을 가지며 이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조직된 디지털 배당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의 일부는 모두에게 되돌리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플랫폼 기업에 공유지분권 모델은 분배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답변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공유기금은 플랫폼 회사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배당받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나 플랫폼 노동의 통제, 스마트시티의 사회인프라의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감시 자본주의적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과정의 지렛대는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권이며, 따라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이다.

공유지분권 모델의 장점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이슈의 난점 속에서 드러난다. 디지털 전환은 20세기에 형성된 조세국가에 대하여 두 가지의 과제를 내놓았다. 하나는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고용, 임금과 가계 소득은 줄어든다는 문제, 즉 생산성, 임금, 가계소득의 거대한 탈동조화(Great Decoupling)이다(McAfee and Brynjolfsson, 2016).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대중과세(mass taxation)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 하나

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OECD는 '과세기반 침식과 이윤 이전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BEPS)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회피라는 쟁점을 다루어 왔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에서 확정적 국제규범의 도입은 요원한 상태이다. 글로벌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 국민국가적으로 조직된 조세제도는 실효성을 잃고 있다. 플랫폼 자본에 대한 공유지분권 모델은 과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법인세를 대체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의 난점은 단순히 법인세 과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도 주주들에게 분해되기에 개인소득세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플랫폼 기업의 대주주는 어떤 한 국가에 거주하고 그 국가에 배당소득세를 내겠지만 그가 얻은 수익은 전 인류의 빅데이터에서 비롯된다. 소득세에 의해서 공유부가 환수될 것이라는 가정은 글로벌 플랫폼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글로벌 불평등을 간과하게 만든다. 글로벌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이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수익을 국민국가별로 분할 획정하고 국민국가는 이를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배당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빅데이터 공유부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available at: https://basicincomekorea.org/articlesofassociation/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16). "About basic income", available at: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

Brynjolfsson, E. and A. McAfee (2016).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Paperback,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14).

Meade, James E. (1993[1964]).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Reprinted in James Meade,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Basingstoke: Palgrave

Paine, Thomas (1969[1796]). "Agrarian Justice", *The Complete Writings of Thomas Paine*, New York: Citadel Press, Vol. 1, pp. 605~624.

Schachtschneider, Ulrich (2014). F*reiheit, Gleichheit, Gelassenheit: Mit dem Ökologischen Grundeinkommen aus der Wachstumsfalle*, München: Oekom Verlag.

Simon, Herbert Alexander (2000). "UBI and the Flat Tax", *Boston Review*. Oct. 1. In Phillippe van Parijs, Joshua Cohen, and Joel Rogers (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oston: Beacon Press.

Spence, Thomas (1982[1797]). "The Rights of Infants". In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Srnicek, Nick (2017). *Platform Capitalism*, Cambridge: Polity Books.

Widerquist, Karl and Allan Sheahen (2012). "The Basic Income Guarantee in the United States: Past Experience, Current Proposals". In Murray, Matthew and Carole Pateman (Eds.),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Varoufakis, Y. (2016). "The Universal Right to Capital Incom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basic-income-funded-by-capital-income

왜, 다시 기본소득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역사는 반복되고 후퇴하거나 진보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본소득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그러나 일정 시점에서는 뜨겁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단순히 기본소득 이념이 유토피아(ou-topos; nowhere; 어디에도 없는 장소)적이고 또한 급진적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정치적 힘이 부재했기 때문일까?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19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을 역사화하기(historization)

가이 스탠딩에 따르면, 서구 기본소득 이념의 역사는 약 16세기~1차 대전 이전 첫 번째 물결, 1차 대전 이후 두 번째 물결, 1960년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 세 번째 물결을 거쳐 198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창립과 함께 네 번째 물결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물결은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에 대한 대응으로,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의 진전에 맞서 일의 가치와 공동체 보존을 위한 사회조정방식을 상상한 산물이었다. 두 번째 물결을 추동한 근본적 동인은 사회정의로, 전쟁의 과오와 노동자계급의 대거 희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는 사민주의자/공산주의자/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등이 주장한 '보편적 노동주의'에 의해 분쇄되었다. 세 번째 물결은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우려가 사라지자 약화된다. 네 번째 물결은 로봇공학/자동화/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한다(Standing, 2017/2018: 26-37).

남반구의 경우, 기본소득의 사회적/도덕적 기반은 서구와는 상이하다. 임금노동시장의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노동시장 밖에 위치한다. 이들은 추상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구체적 재화에 대한 몫으로서 사회적 급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편적 현금급여는 여러 긍정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들을 낳고 있다. 여기서 보편적 현금급여

(주로 CCT 형태)가 기본소득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주목할 점은 남반구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서구와는 다른 맥락의 새로운 분배정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Ferguson, 2015/2017).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가? 첫 번째 꼭지는, 서구의 4번째 물결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명하며,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분배체계에 대한 고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자산불평등의 확대, 노동생산성-실질임금, 고용-가계소득 간 탈동조화, 중산층의 붕괴 등이 예상된다(강남훈, 2019).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의 모습은 고용형태의 다각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법과 사회보장정책에서 '근로자성' 획득에 실패한 사람들, 유급노동시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백승호•서정희, 2017). 둘째,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이라고 범주화 되는 사람들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가능인구에서 잉여인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꿈을 상실한 청년 집단의 '제도적 공백' 문제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읽어낼 수 있다. 다차원적인 청년의 문제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본소득이 어떠한 측면에서 해법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셋째, 농민수당이 논의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출마자가 '농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들을 발표하였으며, 선거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예고하고 있다. 직접지불제의 불평등성, 농가의 저소득화 극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 노동환경 개선,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용렬 외, 2018). 넷째, 공유자산에 대한 배당이다. 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지공유자산에 대한 주장은 서구에서는 토마스 페인, 토마스 스펜서, 샤를 푸리에, 조셉 샤를리에 등이 있었고, 국내의 경우 2017년 대선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생애주기별/특수/토지 배당을 공약하였다. 다른 한편, 지식공유자산에 대한 배당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플랫폼에 쌓인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지,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 인클로저'로 인해 얻는 수익에 대한 소유가 온전히 기업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인한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커먼즈(commons)에 대한 공정한 분배기제로 제안된다(금민, 2017). 넷째, 녹색당에서는 2016년 총선 의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지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중독 탈출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러한 논의지형으로 보았을 때, 질문을 다르게 해 보자. 왜 발달된 복지국가라고 평가되는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거칠게 말하자면, 스웨덴에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제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혹은 사회로부터 급부를 지급받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을 논할 필요가 적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포괄성과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질적 측면이 부족하다. 결국,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사회적 보호체계의 제도적 공백'의 부분, 기술변화에 따른 축적체계의 변화와 불안정 노동의 심화에 따른 '삶의 불안정성 증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 만이' 답인가의 질문은 아직 괄호 안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역사와 시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사회가 무엇을 '결여'하고 있고 '욕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징후로 읽어낼 수 있다.

기본소득 논의의 두 가지 '관점'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왜 다시 기본소득을 말하려고 하는지'의 이유를 드러내는데 이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 예를 들어, 불평등과 빈곤, 불안정 노동시장의 구조화, 생산체제의 지속불가능성, 젠더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동화된 평등기제로서 혹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의 기본소득,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기본

소득, 젠더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기본소득 등으로 논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제도와의 세밀한 관계설정과 정책 패키지 구성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의 대부분은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하나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본소득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당위도 존재한다.

반면 두 번째 관점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당위를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민권으로서 기본소득, 공유부에 대한 공정한 몫으로서 기본소득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지급 범위를 어떠한 시민(공동체)으로 구획하는지, 공유부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소득을 어떠한 측면에서 논하기를 원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후자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방점을 두는 것이 '사회적 전환 전략'으로서 더욱 강력하며 확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의 자산, 공유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는 부분이다.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 (right to have Basic Income)'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의 중요한 근거는 '시민권'과 '공유부에 대한 권리'이다. 먼저 영국 학자인 Fitzpatrick(1999)은 그의 저서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원칙인 기여와 결핍(want)/욕구(need)의 원칙이 아닌, 국적 또는 거주조건만을 갖추면 충족하는 시민권의 원칙(principle of citizenship)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시민권의 원칙에 위치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역시 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금민, 2017). 또한 수급자격이 '시민'으로 국한되는 것은 노동이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급부의 범위가 국민국가 단위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적 접근은 기본소득을 보편적 시민의 권리로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페미니스트 학자 Pateman(2004)은 기본소득의 장점을 시민권을 민주화하는 방식(Democratizing Citizenship)에서 찾는다. Parijs의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과 Ackerman & Alstott의 사회적 지분급여에서 가정하는 '개인적 기회로서의 시민의 자유'를 검토한다. 그녀는 이를 자율성 혹은 자치(self-government)로서의 개인의 자유로 확장하고 이를 하나의 정치적 형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개인의 경제적/사적 기회들, 집합적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한다. 자치로서 개인의 자유, 민주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고용되지 않을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어떻게 기본소득이 소득과 고용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결혼-고용-시민권의 상호 재강화를 분리시킬 수 있는지를 논한다.

한편, Scott(1989)는 보편적 권리 담론을 비판하고, 공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열망'이라고 말한다. 스콧은 Salecl(1994)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권리를 우리가 소유한 무엇이라기보다는 욕망의 표현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추상적 개인 없이도 권리를 담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욕망(열망, 인간적 상상의 지향)은 보다 평등주의적인 정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떤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에 대한 요구는 욕망하는 주체로서 그들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위치에 대한 주장이다. 그들의 욕망은 어떤 물리적 속성의 소유나 특정 생물학적 기능의 수행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의 구성 자체에 연관된 결여에서 비롯된다. 개인성은 그 존재를 위해 타자로부터의 구분 및 타자에 의한 인정에 의존한다. 그러나 자아는, 전적으로 자기충족적인 것

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재현(representation)없이 그리고 타자 없이 지낼 수 없다. 자기충족성의 성취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바로 이로부터, 공동체가 공통성(commonality)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고 (차이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해 역설적으로 결합되는) 개인들의 연합으로 이해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배은경, 2001: 240-241)

공동의 기반이 타자와 관계 맺고 있는 "존재의 구성 자체에서 연관된 결여"에서 비롯된 욕망에 근거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특수한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제제기하며,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자와 연합하는 결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현실에 접합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단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work)에 대한 보상 혹은 인정일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시민권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지음 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의 두 번째 근거는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다. 토지, 생태환경, 지식, 사회적 협동 등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두의 것이므로 커먼즈에서 비롯된 부는 정치공동체가 환수하여 다시 구성원에서 동등한 몫으로 돌려주어야 하다는 관점이다(금민, 2017: 4-5). 이 때 공유부의 원천은 무엇이며, 공유부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생산과 공유란 무엇인지, 공유경제에서 권력과 착취의 관계는 어떠한지로 이어진다. 이때 현재의 체제가 시간성을 어떻게 구획하고 있는지, 기본소득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그 안에 놓인 지속가능한 부는 무엇이고, 이것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발화하는 것의 의미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기존의 담론들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들(fields)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토론하고 연구함으로써, 노동과 생산, 복지와 노동, 권리와 공유,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담론들을 성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이 던지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보다 선명한 입장들을 견지하는 것, 입장들 간의 교류를 통해 '기본소득'을 구체적 실천 안에 위치시키는 것, 이를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기본소득을 '발화'하는 궁극적 이유일 것이다.

참고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권정임 (2019). "생태공유지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인문사회 21』 10(2). pp. 1565~1580.

금민 (2017). "공유부배당의 논변구조와 기본소득론의 사회상". 『월간 좌파』 48.

김교성, 서정희,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용렬, 송성환, 김창호, 우성휘, 이청은 (2018).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승호, 서정희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pp. 113~152.

가이 스탠딩 (2017/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창비.

제임스 퍼거슨 (2015/2017). 『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 역. 여문책.

Brown, W. (1995). *States of injury: Power and freedom in late modernity* (Vol. 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Palgrave Macmillan.

Joan, Scott. (1989/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 역. 『여성과 사회』 13, pp. 210~249.

Pateman, C. (2004).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pp. 89~10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

공정 세상의 꿈, 기본소득에서 찾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오준호
작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지은이

"기본소득, 지역화폐, 국토보유세를 결합하면 대다수 국민이 행복해진다."

"땅도 없는 사람이 국토보유세 오해할 때 마음이 아프다."

도지사 집무실은 아담했다. 십여 명이 앉으면 꽉 찰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 한쪽 벽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이 채웠다. 이재명 지사는 책상에서 일어나 두세 걸음 만에 내게 다가와 악수를 했다. 그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지만, 인터뷰에 들어가자 예정 시간을 넘겨가며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공정 세상'의 꿈과 만나므로 지지한다고 했는데, 인터뷰 내내 그 꿈에 대한 그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 1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와 포퓰리즘 비판이 거셌으나, 청년배당은 청년과 지역 소상인들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 지사는 올해(2019년) 4월부터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 17만 5천 명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액수는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이후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커진 게 힘이 됐다. 올해 4월 29~30일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 박람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되었고, 연인원 1만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넘어 전 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인터뷰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수원 경기도청에서 이뤄졌다.

다른 정치인과 달리 기본소득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기본소득의 어떤 점에 이끌렸나?

- 기본소득이 제가 꿈꾸는 공정 세상과 만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도 진통이 많았지 않나? 결국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복지제도 도입이 불가피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비중이 줄어든 상황, 소수가 과도한 초과이익을 차지한 상황 때문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체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체제가 붕괴됐다. 우리 사회도 그럴 수 있어서 새로운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결국은 기본소득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부의 집중, 과도한 초과이익의 또 다른 문제는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다. 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줄어든 대중에게 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본다.

해외에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진행되었지만 빈곤층을 1차적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 전부에게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청년기본소득의 의의는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알다시피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금을 정기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것이라 기본소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조금 부족하지만 형태와 원리는 비슷하고, 초보적 도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재원 문제로 일부만 해야 했는데 왜 청년을 선택했냐고 하면, 청년 세대가 생애주기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기회가 많았던 과거에는 청년에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세대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지금 청년 세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과거 시각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에게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의 전파 효과도 고려했다.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는) 아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사

회에 화두를 던지는 과정이다. 필요성의 측면에서 청년이 가장 이것을 필요로 하고,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도 '청년'이 갖는 폭발력이 있을 거라 여겼다.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독창적인 부분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이다. 한편 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역화폐 방식을 택한 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형마트 등 매출규모가 큰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 한 가지 이유는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왜 청년에게 현금을 공짜로 주느냐고 하는 포퓰리즘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저항이 있다. 그러나 효과가 크고 혜택을 보는 집단이 커질수록 저항이 줄어들지 않나?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직접 혜택 보는 사람(청년)들이 (일반적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전반이 혜택을 보도록 설계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통시장 상인들, 골목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실제 효과가 있었다. 청년배당을 시행한 2016년에 성남의 전통시장 매출이 26% 늘어났다. 그래서 골목 상인과 동네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 방식의 청년배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자기들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요약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똑같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보게끔 정책의 중첩적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저는 안산에 살면서 지역화폐 카드를 신청해 사용해봤는데 우려했던 것에 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더라. 주변에도 만족하는 반응을 많이 접했다.

-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복권방에서 복권 못 사게 하니까.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도 한다. 지역화폐는 그런 면이 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함께 사는 공동체로 가자는 거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이익도 고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경기도 기본소득을 넘어 온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한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 "공동의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자"고 했고, 또 일관되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

- 새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정책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 많은 사회는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권력에 줄 서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는다. 노동이 존중되는,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정상적 사회를 만들려면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에서 심각한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 토지 불로소득이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아무도 살지 않는 강원도 산골 산도 땅값이 비싸서 나무도 못 심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적다는 거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올리는 거다. 부동산 보유세가 현재 0.3% 정돈데 같은 자산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1.8~2% 정도 하는 것의 6분의 1이다. 서민들 재산인 자동차는 세금이 그렇게 비싼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낮나. 이런 걸 고려하면, 세율을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5% 정도로 올리자고 해도 큰 저항은 없을 거다. 그러면 추가로 15조 원 정도를 더 걷어서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줄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결합하는 것인가.

-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기본소득을 주면, 부정의는 줄고 국민의 소득은 늘어난다. 두 정책을 결합하니 다수 국민이 행복해진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국토보유세를 하나로 엮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책의 공감도가 높아진다.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해야 할 것 아

니가?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반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식을 찾자. 그게 국토보유세다. 토지는 대표적인 우리의 공동자산이다. 유한한 국토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라고 쓰여 있다. 게다가 당장 재원이 엄청나게 들 이유도 없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아동수당, 그것도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아동수당을 7세 미만까지 주고,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주고, 앞으로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 따지지 말고 다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빈 구간을 차곡차곡 메워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액수가 적더라도 기본소득 제도가 완성된다. 액수는 늘리면 된다. 기본소득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다.

그런데 서민들은 내 세금이 오르면 부담스럽다고 한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거둬서 똑같이 다 나눠주면, 부동산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더 받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약 94%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 집을 수백 채 보유하고 있거나 대지를 수만 평 보유한 5~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증세에 동의할 거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 낭비할 거라는 불신이 있다.

-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체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15조 원 정도를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1인당 30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냈는데 돌려받네? 조금 더 내면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우리 사회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라서, 결국은 복지를 늘리고 부담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고 생각한다.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저항이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도 불만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느끼니까. 우리 국민도 그 체험을 해봤으면 한다. 체험을 해보면 월 3만 원 수준 기본소득이 5만 원으로 또 그 이상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 없이 증세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조세 권한이 없는데,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활용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보유세 외에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익을 시민배당으로 지급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 대한민국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의 이익은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다 가져갔다. 이것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을 민영개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여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도로, 터널 개설과 공원 조성 등에 쓰고 남은 1,800억 원을 시민들이 주권행사의 이익을 직접 누리도록 지역화폐로 배당하려고 검토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자본과 협업하여 상당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 확보에도 쓰겠지만 그 이익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면 계속 발생하기 어려우니까 지속적인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계속 밀고 나가실 텐데,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 기득권 세력들의 복지 포퓰리즘 공격을 막아내는 거다.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기본소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일을 안 할 거다,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다' 같은.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 아니라 우파들도 제안한 정책이다. 결국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이득을 볼 압도적 다수, 그리고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누렸던 힘센 소수 사이의 논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으로 혜택 볼 사람들이 도리어 반대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땅도 없는 사람

이 국토보유세를 욕한다. 빨갱이 정책이라고. 헌법에 쓰여 있는 사실임을 모르고 왜 남이 열심히 번 재산을 빼앗으려 하느냐고 비난하는데, 힘센 소수의 선전에 놀아나는 거다. 작은 정책부터 시작해서, 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같은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를 깨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해외 실험이나 사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해외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해외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말해 달라.

- 해외의 기본소득 사례들이 실험이라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 액수가 적어서 실험적 효과는 부족할 수 있다. 1년 동안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것이라 기본소득의 기준에 비춰 충분하진 않다. 하지만 부분적이나마 정책을 시행하면서 논의를 확산하려고 한다. 어쨌든 한 해에 15만 명 이상, 앞으로 수십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평생토록 받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면 의미가 있다. 다만 재정 능력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하고,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려가야 할 것이다. 장차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데, 국가적 결단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국민들이 결단하려면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하고 욕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제도가 도움이 될 거다.

기본소득을 알리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치인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이다. 기본소득을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 일단 생각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말해야 한다. 말한 다음에는 조직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 또는 국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조직해보면 어떨까. 변화는 결국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뤄내는 거다. 누가 하겠나? 원래 세상을 바꾸는 일은 힘 있는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힘없는 다수가 모여야 할 수 있다.

혁명은 종이 위에서 시작된다

강남훈 BIKN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어
오준호
작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지은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며 공부와 실천이 합쳐져서 행복했다."

"내 논문을 일반 독자들이 읽어줘서 고마웠다."

강남훈 교수는 맑게 웃으며 말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이론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창립하고 10년간 이끌어온 실천가인 강남훈 교수에게 행복은 이처럼 소박하다. 하지만 그가 이루어 온 성과는 결코 소박하지 않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이 정의롭고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탄탄한 경제학적 근거를 제공해왔고, 좋은 사회를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도록 기본소득의 내용을 확장해왔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남훈 교수님이 나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인정했듯이, 기본소득을 현실 정책 의제로 만드는 데도 강남훈 교수의 역할은 컸다. 최근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을 출간하고, 여름이 가기 전 다음 연구를 책으로 내려고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운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큰 도약판을 만난 지금, 강남훈 교수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간 기본소득>의 출간을 맞아 독자가 궁금해 할 첫 인물로 강남훈 교수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2019년 6월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그 주변에서 진행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10주년을 맞았다. 10년 전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무엇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는지?

-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시작됐다. 기본소득이 현실 정치의 의제로 올라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 시점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중앙정치에서도 지난 대선에 후보들 사이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있었으니까 다음 대선에 또 올라올 거다.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회비를 내는 회원이 5백 명에 이른다. 기본소득 운동을 후원하고 함께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났다.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는?

- 소비에트식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민주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효율성도 없어 무너져 내렸다. 그 후 신자유주의가 닥쳤는데 그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현존하는 경제적 대안이 다 사라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곽노완 교수(한신대)의 논문을 통해 독일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고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 미래 사회의 대안적 경제 제도가 될 거라고 여겨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하고 보니 역사적 뿌리가 아주 깊었다. 좀 더 개인적인 배경으로, 어느 집안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개인끼리 자선으로 돕는 건 쉽지 않은 일이며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기본소득 운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스스로 계속 동기를 부여했나?

-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고 좋았던 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다. 그전에는 공부와 실천이 따로따로였다. 공부는 경제학 공부인데 실천은 민주화, 독재 타도였다. 경제학 공부와 독재 타도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공부와 실천의 괴리를 느끼다가,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고는 공부와 활동의 목표가 같아졌다. 학자로서 행복하더라. 나의 논문을 읽어주는 독자가 교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면서 일반 독자가 내 논문을 읽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교수님이 글 쓰실 때 재치 있는 비유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다. 올해 내신 <기본소득의 경제학>에 나오는, 성서 속 '과부의 항아리' 비유라든가.

- 경제학 공부하면서는 거의 못 읽었지만, 어렸을 땐 문학을 많이 읽었다. 나중에는 전공과 사회과학만 주로 읽었지만.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작되었을 때 그동안의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다.

- 청년배당이 시작되는 걸 보며 우리의 꿈, 우리의 정책 제안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 혁명도 작은 꿈에서 시작되지 않나. 옛날에 정치경제학을 배울 때 '혁명은 종이 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다. 레볼루션 비긴스 온 페이퍼(Revolution begins on paper). 종이는 제안서나 설계도일 수 있고 홍보물일 수도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의 내용은 기본소득이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지속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실업자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과거에는 완전고용 상태여서,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에서 5% 사이였다. 이 제도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5% 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실업률이 10%를 넘고, 청년의 경우 20%가 넘는다. 만약 20% 청년 실업자에게 구직수당을 준다고 하자. 그런데 현재 청년 불안정 노동자가 또 20% 정도다. 그들은 일을 해도 불안정하므로, 실업자가 수당을 받는 걸 보면 자기들도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40%가 일을 안 하고 수당을 받게 된다. 이런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을 가지고 불안정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와주기가 어렵다. 또 불안정 노동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실업자만 도와주기도 어렵다. 실업자에게 50만원 주고 불안정노동자에게 30만원 주는 식으로 복잡하게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든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걷자는 거다. 기본소득을 주면, 불안정 노동자가 노동 안하고 구직수당 타려고 할 필요가 없다. 기본소득은 단순하면서 부작용 없는 보장 제도다.

확실히 여러 새 선별지원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되는 중인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 복잡한 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해친다. 복지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이리저리 바꾸게 만들면 시장이 왜곡된다. 저임금으로 일하던 사람이 실업자가 실업수당 받는 걸 보고 자기도 일을 포기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계속 하면 된다. 현재의 복지제도 속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올려주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고 실업자 도와주면 비정규직이 타격받는다.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경제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진다. 다 도와주려면 깔끔하게 기본소득 하면 된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게 기본소득의 주요 논거인데, 일자리가 실제로 그만큼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 일자리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이야기까지 안 해도 현재의 일자리 불안정만 보더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분하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소멸의 대책 이전에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자는 거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줄면서 충격이 올 것은 확실하다. 택시와 '타다'의 갈등을 보더라도, 이 서비스를 설령 막는다 해도 5년에서 10년이면 자율자동차가 나올 거다. 무인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땐 지금의 갈등이 무의미해진다. 택시 운전, 버스나 트럭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별로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시각이 아닐까.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나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

- 정부는 본질적으로는 세금을 거둬 현금을 살포하는 기구다. 정부가 제대로 돈을 살포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대체로 정부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살포한다. 국방이나 공무원 임금 같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비용을 제외하면, 정부의 현금 살포는 크게 두 방향이다. 경제사업에 쓰느냐 복지사업에 쓰느냐. 복지에는 너무 적게 쓰고 경제에 너무 많이 써왔다. 경제사업에 돈을 살포하면 부자들에게 이롭다. 복지에 살포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롭다. 부자에게 유리하게 살포하던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자는 거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살포해왔는데 아무도 그건 포퓰리즘이라 안 부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만 포퓰리즘이라 한다.

경제사업에 돈을 살포하면 어떻게 부자에게 이로운가.

- 일단 돈이 직접 부자들에게 많이 간다. 그런데 과거엔 경제사업이 주로 토건, SOC사업이었다. 근로자를 많이 고용했고 그들이 임금을 가져갔으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이 갔다. 지금은 고용이 줄어서 분배 기능이 약화됐다. 둘째로 토건 사업을 하면 땅값이 올라 땅주인들은 앉아서 벌고 가난한 사람은 쫓겨난다. 이전엔 약간의 임금인상과 경기부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부자에게 많이 가고 기업에 머문다. 또 땅값을 올려 가난한 사람 쫓아내고 자산 격차를 키운다. 기본소득으로 복지에 살포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게 다 돌아간다. 더불어 내수 진작 효과도 있다 .

아시다시피, 현금을 주면 한정된 예산이 줄면서 공공서비스가 위축된다는 비판도 있다.

-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공공서비스 위축시키면서 기본소득 늘리는 데 반대한다. 공공서비스 줄이는 거 반대한다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비판할까. 무상급식 생기면서 공공서비스가 줄었나? 아동수당 도입되면서 다른 복지 줄었나? 실제로는 기본소득과 공공서비스는 함께 늘어난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관점인 거 같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있다고 하면, 선별복지를 할 예산으로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는 거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경제사업 줄여서 만든 예산이지 기존 복지를 줄여서 만든 예산이 아니다. 그 예산으로 선별복지를 늘리지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은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에서 더 근본적인 대립이 있다면 경제사업 비용을 줄이고 복지사업 늘리는 데서 불거지는 대립이다. 그런데 선별복지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라 복지사업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걸로 본다. 확보된 거 없다. 만들어내야 하는 거다.

기본소득이든 선별복지든 예산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지난한 싸움이다.

- 결국은 경제사업 줄여서 그 돈을 선별복지에 쓰든가 보편복지에 쓰든가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사업 줄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선별복지를 위해 경제사업을 줄이자고 하는 것보다 보편복지를 위해 줄이자고 하는 게 동의를 구하기가 더 쉽다. 혜택 받을 대상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게 민주주의다. 다수에게 세금을 거둬 소수의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 진짜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하면 찬성하겠지만, 경제사업 줄여서 실업자 도와주자고 하면 비정규직이 싫어할 거다. 보편복지 하는 게 예산 확보가 더 쉽다. 분명한 건,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선별이고 보편이고 닥치는 대로 늘려야 한다는 거다. 뭐든 되는 것부터 늘려야 한다. 돈부터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를 설득하려면 기본소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어째서 그런가?

- 절대 다수가 혜택 받기 때문이다. 선별복지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선별복지 늘리기 위한 증세를 설득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본소득 위해 증세 설득하겠다. 누구든 먼저 설득하면 된다. 전통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전통적 복지부터 확대하자는 주장에 반대 안 한다. 그 제도를 가지고 액수도 대상도 늘려가다가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알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나는 선별복지 하자는 분들에게 액수도 늘리고 같이 잘해보자고 하고 싶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와 선별복지를 위한 증세 중에서 어느 게 먼저 국민 동의를 받는지.

사회 공동의 부(富)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재원이 되는 공동부가 고갈되어 더 이상 기본소득을 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재원이 불안정한 것은 아닌가?

- 재원에 따라 다르다. 탄소 배출에 탄소세를 매기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다 없어지면 못 준다. 하지만 그걸로 탄소 배출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한 거다. 또 지구 살리기에 탄소 배출 줄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환경을 오염하는 다른 소재(가령 플라스틱)도 사용을 줄여야 한다. 세금 부과할 다른 대상을 찾으면 되고, 목표 달성하면 더 안 걷어도 된다. 부동산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금보다 한 30% 더 떨어져야 바람직하다. 세율을 올리면 부동산 보유가 매력이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될 거다. 그렇다고 세금 원천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토지 사용은 계속 하니까 세금을 계속 걷을 수 있다.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토지배당은 계속 줄 수 있다는 뜻인가.

- 환경배당은 목표 달성되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토지배당은 없어지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지식배당이 있다. 일반적인 소득에 과세하여 주는 기본소득을 나는 지식배당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동부 가운데 중요한 원천 하나는 지식이다. 지식에서 부가 생긴다. 지식도 노동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의 핵심을 근육이 아니라 지식으로 보는 거다. 앞으로 소득은 점점 더 남의 지식을 많이 써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지식배당은 앞으로 더 늘게 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소득은 거의 다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건데 결국 지식을 활용한 거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을 가려내 보상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지식을 공동부로 보아 지식배당을 주는 게 낫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본격 시작됐다. 그 의의와 효과를 살피는 조사 계획은 어떠한가.

-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조사를 같이 진행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효과에 대해 과학적 통계를 못 만들어낸 게 아쉽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그걸 만들려고 한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결합해서 줘서 소상공인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경우,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소상공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 조사는 크게 3가지 방식이다. 빅데이터 조사, 크로스섹션 조사(설문조사), 패널 조사(동일인을 추적해서 조사). 여기에 정부 통계를 합쳐서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다. 한편 청년들은 17만 5천 명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신청할 때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다. 물론 모두가 다 응답하지는 않을 거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에게 신청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려고 한다. 전부는 아니어도 매우 큰 데이터가 모일 것이다.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은 거시 차원에서 경제효과를 측정할 만한 실험이 없었다. 샘플이 적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규모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 아주 거시적이다.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지, 불로소득이 줄어드는지 보려 한다. 2~3년 뒤에는 과학적으로 확인한 효과를 발표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도 불평등이 줄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선 기본소득(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말씀하셨다. 공동선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 공동선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인 건 공동선(common good)이 곧 정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결정하는 게 정치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져올 때, 주권자는 돈도 받아야 하고 인간으로도 받아야 한다. 인간으로 받는다는 건 주권자들이 그들을 대리할 정치인들을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10만 명당 대리인 한 명을 가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20만 명당 한 명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하다. 그런데 현재 선거제도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 기본소득을 균등하게 받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자기들의 정치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인도 일종의 기본소득이라는 건데 참신하게 들린다.

- 비유적인 표현이다. 또한 대리인들을 비례적으로 뽑더라도 그들이 주권자 말을 듣게 해야 한다. 주권자는 표를 기본으로 가지지만 정치자금도 기본으로 똑같이 가지고 시작하자. 주권자들에게 1년치 정치후원금을 똑같이 나눠주

고 정치를 시작하자. 1년에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주권자들이 각기 10만 원으로 그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인을 후원하게 한다. 기본소득으로 경제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 액수가 되어야 하지만, 정치 기본소득은 고작 4조 원 정도로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재원이 많이 안 드는데 효과는 크다. 정치후원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현행 정치후원 제도는 사실 위헌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환급받을 수 있어서 정규직은 되는데 전업주부, 비정규직, 노인, 학생은 환급받지 못한다. 차별이다.

공동선 기본소득에 정치 기본소득과 함께 언론 기본소득도 주장했다.

- 현대 정치에 언론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기업만 언론을 후원하면서 언론이 대기업의 편에 선다. 언론인을 후원해줄 수 있는 10만원씩을 주권자들이 가지고 시작하자. 역시 연간 3~4조 원이면 방송국 이외의 언론인은 먹고살도록 해줄 수 있다. 대기업 눈치 안 보는 좋은 언론을 국민이 키우는 거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다. 부자가 정치자금이 더 많아서 정치가 부자를 위해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도 정치후원금, 언론후원금, 비례적인 대리인을 갖춰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8월 말까지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을 쓰려고 한다. 기본소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관한 거다.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시민들은 무얼 하면 좋을까?

-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된다고 한다. 내가 죽기 전에도 조금은 될 거다. 시민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의사,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지에 대해 찬성 의사가 50% 정도로 나오는데 80% 나오게 해야 한다. 시민 80%가 좋다고 하는 정책은 실현될 수 있다.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주변에 알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매우 중요하다. 세금이 드는 큰 정책을 50%가 지지하는 수준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80% 이상 지지가 나오면 정치인들이 서로 하겠다고 할 거다. 그러면 실현된다.

거북이 날다

두보(杜甫) 초당에서

문정희

이 정원을 전생에 거닌 적이 있다
숲속에서 천년 고요가 튀어나와
내 슬픔을 쓰다듬는다
걱정마라! 잠시 지나가는 바람들
때로 사납지만
고달픈 기다림
칼 같은 분노
한 줄 시일뿐이다

술 한 잔 받아라
시인을 취하게 한 사랑을 아는가
시인을 풍요롭게 한 고통을 아는가
들어가는 문도 나가는 문도 없는
어둠 속에
헛된 이름을 새기기 위해
검은 돌을 팠던
나는 누구인가
너는 또 누구인가

술 한 잔 받아라
거북이 등처럼 터진 가난을 등에 지고
다시 천 년의 긴 문장을 따라 나선다

나날들

나희덕

나날들이 나달나달해졌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 있자는 말을 들었다

축생도에 속한 존재들은
오늘도 우글거리다 우리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는 무수한 비늘들과 털들이 흩어져 있다
잘린 줄 모르고 여전히 날름거리는 혓바닥도 몇 있다

—이봐, 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어.

—저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구제 불능이에요. 미쳤다고요.

—당신은 대체 그 말을 믿습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어디 끝까지 해보자구.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널 용서한 건 아니야.

—아, 어지러워 죽겠어요.

달팽이관에서 흘러나온 돌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절망은 길가의 돌보다 사소해졌다
아직 사람으로 남아 있느냐고 누군가 물었다

축생도의 우기가 너무 길다
축축한 빨랫감들이 내뿜는 냄새를 견딜 수 없다

좀처럼 마르지 않는 나날들이다

(재수록, 원문은 나희덕, “파일명 서정시”, 창비, 2018년.)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코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근의 문화적 실천들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문화시평'이며, 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 운동과 문화적 실천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작업을 해보려 한다.

임박한 파국과 기본소득이라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류보선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구의 인간 거주자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동묘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그문트 바우만, <레트로토피아 ; 실패한 낙원의 귀환>

1.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주제 넘는 짓이라는 걸 안다. 바우만의 이름이라면 들어 보긴 했다. '액체근대', '유동하는 공포',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로운 빈곤' 등 바우만을 대표하는 몇몇 개념들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다. 하지만 바우만의 사회학이 그려간 궤적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사회학이 새롭게 개척해낸 영역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가 쌓아 올린 고뇌의 성좌는, 내 인식 수준에서는, 측량불가능하고 식별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비록 바우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도 그의 글 몇 구절만 읽으면 감지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우만이야말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대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요하게 읽어내고자 했고 그 결과 이 복잡한 현대세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파국을 막으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 누구보다 경청할 만한 성찰을 해낸 사회학자라는 것.

『레트로토피아』는 바우만의 유작이다. '유작답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레트로토피아』는 노대가의 유작답다고 고집하고 싶다. 『레트로토피아』엔 한평생 '만인이 만인과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대가의 오늘날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를 같이 헤쳐나가지 못하고 먼저 세상 밖으로 떠난다는 죄책감과 그래도 부디 남은 이들이 이 혼돈을 잘 헤쳐가기를 바란다는 격려가 넘친다.

『레트로토피아』는 말한다. 오늘날은 퇴행의 시대다. 오늘날 인류 전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음과 동시에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시대'로 되돌아갔고, 그와 동시에 인류가 치열한 쟁투 끝에 간신히 지양해 나온 과거의 어떤 즉물적인 상태로 퇴화하고 있다. 『레트로토피아』는 인류가 뒤돌아간 퇴행의 표지로 '홉즈로의 회귀?', '부족으로의 회귀', '불평등으로의 회귀', '자궁으로의 회귀'를 지목한다. 그리고 이를 합쳐 '실패한 낙원의 귀환'이라고 명명한다. 『레트로토피아』에 따르면 현재 인류는 신자유주의라는 전체주의에 지배되어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정신적 동물왕국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이 정신적 퇴행이 공포인 것은 정신적으론 동물왕국의 상태를 저회하고 있는데 그들 손에 쥐인 무기는 순식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레트로토피아』는 경고한다. 인류에겐 지금 기사회생의 묘수와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내의 자세가 절실하며, 만약 그것이 없이 지금 이대로 질주한다면 인류는 공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덧붙인다. 부디, 건투를 빈다고.

2.

굳이 『레트로토피아』의 진단을 빌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에 없는 위기적 상황임을 감지하기란 어렵지 않다. 들리느니 종말의 서사이고 보이느니 디스토피아적 전미래이기 때문이다.

여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다. 한국 최초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모든 문제적인 작품이 그러하듯 <기생충>도 여러 다양한 누빔점으로 맥락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면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고, 저렇게 재구성하면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의 잘 짜여진 예술품이 되는 식이다.

<기생충>은 세 가족 이야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족의 몰락기이다. 여기, 세 가족이 있다. 한 가족은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늘 더 큰 구별과 특권을 원하는 1퍼센트'의 '외부인 출입제한 지역'에서 품위 있게 살고, 또 한 가족은 '반지하'에서 허덕이며 살며, 나머지 한 가족은 '지하'에 갇혀 산다. 한 가족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또 한 가족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나머지 한 가족은 비굴하고 필사적이다.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세 계급 혹은 세 계층으로(두 계급 혹은 두 계층이 아니다!) 분할하는 바,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기생충>은 우리 사회를 저 위에 '극도로 부유한' 분(?)들이 있고, 그에 기생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하층의 두 계급이 있다고 구조화한다. '나 빼놓고 다 망해라'라는 명령을 좇아 사회의 거의 모든 부를 한 계급이 독점하고 있건만, 그래서 그들 빼고 망해버린 아니 그들 때문에 망해버린 두 계급이 있건만, 정작 전선은 상층부와 (두) 하층 사이에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싸움은 두 하층 사이에서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경쟁 혹은 생존투쟁의 형태로 벌어진다. 그리고 상층부는 그 싸움을 전혀 모르거나 간혹 표면으로 나타나면 저 위에서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기생충>은 이처럼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구별짓기-선에 주목한다.

<기생충>의 서사는 반지하에 사는 또 한 가족의 생존투쟁기에서 시작한다. 반지하에서 지하로 추락하기 직전, 이 가족에게 어느날 '운수좋은 날'처럼 동아줄이 내려온다. 모든 가족이 매달릴 만큼 튼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닌 이들 네 명의 가족은 이 끈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필사적이므로 이들에게 예의라든가 품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자신들이 매달린 동아줄에 같이 매달리려는 또 하나의 가족을 가차 없이 밀어낸다. 아등바등, 천신만고 끝에 이들 가족은 아주 잠시 동안 1%의 삶에 대한 흉내내기의 시간을 갖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저 잠시 동안 1%의 삶을 흉내냈을 뿐인데, 그를 위해 나머지 한 가족을 저 지하로 밀어버렸을 뿐인데, 지하로 밀어내기 위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인데, 이들에게 도

래한 신성모독의 결과는 참담하다. 지하의 가족은 더 추락할 곳이 없으니 죽고, '반지하'의 가족은 지하로 쫓겨난다. 그러면, 상층부는? 상층부의 가족 역시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그는 죽음 중엔 최고의 죽음(?)을 맞는다. 즉 그는 죽음으로 더욱 순수한 사람으로 승화된다. 세 가족 모두가 가족구성원 중 누구를 죽음으로 잃지만 그중 숭고한 죽음 혹은 희생양으로 기억되는 것은 상층부 구성원의 죽음뿐이다. 하층부의 죽음은 그 처절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애도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 정당한 심판으로 받아들인다. 죽음들의 결과 상층부는 희생양을 통해 더욱 신성해지고 그에 따라 당연히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의 구별짓기는 견고해진다.

한마디로 <기생충>은 역사의 반복 혹은 반복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영화다.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의 견고한 구별짓기, 하층부 사이의 격렬한 생존투쟁과 비극적인 죽음들, 그리고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의 더욱 견고해지는 구별짓기. <기생충>이 그려낸 이 역사의 반복이 비극적인 것은 이 반복이 나선형의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말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 반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랄(?)같은 전도도 더욱 극심해진다. 사실 우리 사회의 기생충은 상층부다. 그들은 하층부의 소외된 노동과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부 등을 사적으로 독점하고 빨아먹으며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의 몸짓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니 어느새 우리 세계의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기생충>이 그린 것처럼 1%의 상층부 분들에게 하층부의 그 무수한 존재들이 기생하는 꼴이 된다. 종합하자면, 기생충이 숙주로 보이고 숙주가 기생충으로 얹혀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종말 혹은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 이것이 <기생충>이 그려낸 우리 시대의 초상 혹은 자화상이다. 이러한 <기생충>의 현실인식은 지젝의 파국론을 연상시킨다. 슬라보예 지젝은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연설에서 특권층이 아닌 99%의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 전인류를 파탄에 몰아넣은 1%의 특권층이 바로 루저라고 올바로 규정하는 대대적인 인식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류의 파국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거니와, 이를 감안하면 <기생충>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분명해진다. 우리가 기생충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의 상징질서가 아닌 선순환적인 상징질서를 위한 한 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인식상의 전환과 대안적 상상력의 발명이 있지 않는 한 하층부의 존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 그러니까 파국적 상황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

오늘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둡고 우울한 진단은, 그러나 봉준호의 <기생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다양한 내용과 기법으로 줄곧 아이러니적으로 표현해오던 박형서도 최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상을 그려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당신의 노후』((주)현대문학, 2018년)가 그것이다.

『당신의 노후』가 설정하고 있는 시기는 2031년. 그러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80세 인구 노령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노령인구를 부양할 청년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서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터져 나온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 위기에 빠지고, 청년 세대는 그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기는 한편 지하철도 탈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당연 국가는 전방위적으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바, 각 국가기구마다 다양한 TF팀을 꾸린다. 예컨대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산하 기금합리화지원실 소속 노령연금TF팀'같은 것. 장애연금TF팀, 유족연금TF팀같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대부분의 국가기구에서도 '기금합리화'를 위한 별도의 TF팀을 꾸려 운영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 대응이다. 국가에 막대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이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 '적색 리스트'에 올리고 재정 압박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국가가 고용한 살인청부업자들이며, 국가는 이들을 통해 기금 합리화를 유지한다.

물론 『당신의 노후』는 소설인만큼 이러한 미래 예측을 설명조로 서술하진 않는다. 조지 오웰의 『1984』가 그러했듯,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그러했듯, 개연성 높은 소설적 상황을 통해 소설가 자신이 예감하고 있는 미래상을 충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맞닥뜨리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른 현실을 놀라운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해왔던 한국 최고의 아이러니스트의 소설답고, 천의무봉의 현란한 스타일리스트의 소설답다고나 할까. 『당신의 노후』는 놀라운 솜씨로 2031년의 디스토피아적 상황에 시차적 거리감 없이 빠져들게 만든다. 물론 이 몰입감은 작가 특유의 '장치의 승리' 혹은 '기법의 승리'가 행하는 역할이 크다. 『당신의 노후』는 잇단 의문투성이의 자살 사건과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자의적으로 병치되고 불균등하게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한편으로는 자살이라고 보기엔 정황이 맞지 않는 자살 사건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합리화 TF팀의 일원으로 암약하다가 퇴직한 순간 자신의 TF팀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하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제시된다. 주인공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국가 기구라는 초월적 질서와 승부가 뻔한 싸움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거니와 그 과정에서 툭툭 던져진 자살 위장사건들이 주인공과 주인공의 팀이 행한 그것임이 서서히 드러난다. 어쨌든 주인공의 아내를 죽이기 위한 국가 기구의 공격은 집요해지고 그 공격으로부터 아내를 지켜내면서 이전의 자신에 대한 뒤늦은 참회를 행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아무리 깊은 참회를 해도 이 싸움은 애초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결국 주인공은 깊은 참회 끝에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당신의 노후』는 전후좌우 맥락이 없이 툭툭 던져진 사건들과 그 사건들 사이에 배치된 작중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모자이크

식으로 병렬시키다가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야 이종적 통합을 시도하거니와 이 거대한 반전을 통하여 암울한 미래상과 충격적으로 조우하게 한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주는 충격이 단지 잘 짜여진 미장센 때문만은 아니다. 『당신의 노후』가 충격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해낸 암울한 미래상에 있다. 『당신의 노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할 정도로 명료하다. 지금 이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단의 대안적 질서가 필요하며 그러한 질서를 발명하고 그 질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인식과 정동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노후」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기생충>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뜨이는 대로 <기생충>, 『당신의 노후』를 본 셈이지만,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임박한 파국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이라는 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넘어 '나 빼놓고 다 망해라', 그러니까 '내가 1%가 되기 위해서라면 99%의 존재들의 노동과 공유부를 다 빨아들여도 된다'는 과잉의 신자유주의적 독점체계가 지속되는 한 인류의 미래란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정신적 동물왕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글 앞머리에서 인용한 구절을 다시 반복하자면, 지금 이대로라면 우린 '같이 공동묘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아마도 <기생충>과 『당신의 노후』가 행하는 경고는 임박하고 있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처절한 절규이자 그 파국에 도달하기 전에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촉구일 터이다.

3.

맞다.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서로 손을 맞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1%와 99% 사이에 절대적인 분할이 있고 99% 사이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길은 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어떤 가능성을 찾아나서야지, <기생충>에서 표현한 것처럼 서로 칼부림을 하며 공동묘지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10여 년 전 한국문학에 종말의 서사가 유령처럼 떠돌던 시절, 『물속 골리앗』 등으로 종말을 예감하던 『달려라, 아비』의 작가 김애란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 상상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경고나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현재의 상징질서에 대한 냉정하고 냉소적인 비

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비록 실현가능성이 낮더라도, 하여 가다가 멈추더라도 선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을 발명해야 한다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최근 몇몇 표현물에서 사람들의 손을 견고하게 맞잡게 했던 몇몇 감동적인 공통체를 엿본 적이 있다. 먼저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고 있는 듯하지만, 195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참혹한 잔혹극이었고, 그런 까닭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다. 서로 달라서 서로 미워서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와 정동들이 최고치까지 끌어올려져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비파다'로 물들인다. 전쟁은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전쟁은 순식간에 아이들은 어른-아이들로 형질변화를 시키며, 수수께끼와 같은 실재와의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조우는 이 어른-아이들이 일상적인 질서에 자연스레 편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히스테리 환자를 만들거나 유령이 되게 한다. 한국전쟁에서도 숱한 아이들이 전쟁고아가 되거나 어른-아이가 되어 유령처럼 전쟁의 포연 속의 헤매고 다녔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러한 아이들을 눈여겨 본 이가 있었고, 이 이는 아이들은 소련과 폴란드로 말그대로 피난 보낸다. 한데 기적적이게도 이 어른-아이들이 폴란드라는 이국땅에 연착륙한다. 전쟁으로 간절해진 아이들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더 있다. 그들을 돌본 폴란드 사람들의 진심이다. 폴란드인들은 한국전쟁이 있기 몇 년 전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 제 2차 세계대전을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겪은 이들이다.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 아닌가. 그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도 진심어린 애도는커녕 희생양으로도 추모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이들 아닌가. 제 2차 세계대전을 대표적인 호모사케르로 경험한 폴란드인들은 저 이역만리 한반도에서 온 전쟁고아들을 진심으로 환대한다. 데리다가 말한 무조건 환대의 살아 있는 예증처럼 환대한다. 이 환대 끝에 폴란드의 어른들과 한반도의 어른-아이들 사이에는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끈끈한 유대가 형성된다. 이를 나는 고통을 승화시킨 환대의 공통체라고 부르고 싶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며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인위적인 구별의 선을 훌쩍 뛰어넘어 인류 역사에서 보기 힘든 최고의 사랑 혹은 우정의 관계를 형성해낸다. 물론 이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는 현실정치에 의해 다시 단절된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새 조국을 건설하겠다며 자신들이 버렸던 아이들을 불러들였던 것. 그 때문에 북한의 어른-아이들은 세상에는 존재하기 힘든 고통을 승화시킨 환대의 공동체를 떠나 엄혹한 현실 속으로 복귀하지만 이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견고한 우정의 끈은 그들의 마음 속에 아로새겨진다.

추상미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보이는 것만을 재현할 수 있는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우정의 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인위적인 구별의 선을 넘어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포착한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감독 추상미의 첫 출발점인 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기에 충분하다. 감독으로서의 첫 출발 지점부터 임박한 파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의 틈을 찾아냈으니 말이다. 추상미는 인류 역사의 전체를 만들었으면서도 오히려 루저라고 버림받고 학대받는 고통받는 자들끼리의 연대랄까 고통의 공통체가 갖는 잠재성을 감동적으로 재현한다. 즉자적인 생존 투쟁보다 힘겨운 연대의 끈으로 거듭난 인간다운 공통체를 거듭거듭 보여줄 때 모든 인간의 활동과 공유부를 독점하기 위해 세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 신자유주의적 망상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인간 존재들이 하나, 둘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존재들이 서로의 고통을 감싸고 위로하며 '나 빼놓고 다 망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 빼놓고 다 망해라는 생각을 가진 존재들을 빼놓고 손을 맞잡은 세상'을 꿈꾼다면, 파국을 향한 악순환은 어느 순간 정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종국에는 선순환의 나선형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추상미 감독은 감독으로 처음 연출하고 출연한 첫 작품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서 바로 이러한 소중한 진리내용을 걷어올린다. 멋지다! 추상미.

'임박한 파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선의 상상력' 혹은 윤리학을 강력하게 시사받을 수 있기로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도 일독할 만하다.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여행에 관한 산문집이다. 김영하 자신의 삶에 있어 집요하게 반복되었던 여행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반복된 여행 속에서 깨달은 바를 김영하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낸다. 이 화려한 입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대목은 여러 여행 중 몸소 겪었던 '신뢰와 환대의 순환'이라는 경험과 '노바디의 여행'이라는 여러 여행 끝에 얻어낸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여행의 이유」는 여러 곳에서 낯선 이방인인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곳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환대 덕분에 여러 차례 곤경을 벗어났음을 말하고 그 경험이 이곳에 온 이방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선뜻 나서게 한다고 말한다. 여행은 이곳과 저곳 사람, 혹은 이곳과 이곳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환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여행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행의 이유」는 여행을 하되, '노바디의 여행'을 다닐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대접받기 원하는 자, 고향에서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자, 남의 것을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자, 환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시된 진리내용들은 여행에 한정할 때 더욱 값지고 힘 있는 것이 된다.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나는 자꾸 이 '여행'을 '인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여행의 이유」에서 말한 여행의 철학을 우리 인생의

정언명령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질풍노도와 같은 질주를 멈추고 만인이 만인과 공존하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잠시 이곳에 머무는 여행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소유가 필요 없어지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습격하듯 독점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곧 떠날 것이므로 미래의 사람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고 보다 아름답게 남겨두고자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은 서로 신뢰하고 환대하며 만인이 만인과 공존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보자면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여행의 철학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철학을 깊이있게 말한 매혹적인 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힘을 찾는 대부분 문화적 모험들이 구원의 힘을 주로 개인의 윤리적 차원에서, 그리고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쪽에서 찾고 있는 바,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인식론적 전회나 윤리적 각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없고서는 어떤 정책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전망도 다 사람 잡는 도그마로 변질된다. 내용 없는 형식, 영혼 없는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선의로 똘똘 뭉쳐 있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회구성원이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외적 규제, 혹은 더욱 조직화된 '착한 폭력'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자기 스스로를 착하다고 믿는 공권력은 언젠가는 잔혹한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정책도, 제도도, 전망도 각 개인들의 인식론적 전회나 윤리적 각성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각 개인들의 윤리적 전회나 윤리적 각성을 발판으로 한 대안적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 대안적 질서에 대한 탐색을 멈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개인의 윤리적 각성을 감싸 안지 않는 정치성의 구현이 더 큰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다시 말해 개인의 윤리적 각성들과 길항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끊임없는 변증법적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의 문화적 실천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촉구할 뿐 그것을 결집시켜 혁명적 에너지로 폭발시킬 정치성의 영역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마음의 전환의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환된 마음들을 결집시켜 결국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마음의 정치학도 중요하다. 아니, 파국을 향해 치닫는 오늘날을 감안하면 마음의 정치학은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섣부른 것도 문제지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베케트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더 낫게, 그리고 더 낫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4.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로 시작했으니 『레트로토피아』로 글을 마무리하자.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유토피아 프로그램이 뻔뻔하게 귀환하며 인류 전체를 더욱 빠르게 더 큰 재앙으로 몰고가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낀 바우만은 이 재앙을 막아설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한다. 바우만은 말한다.

내 생각에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주장은 중대한 오판이다. 기록으로 잘 정 정리된 현재의 사실들이 '불평등으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어쩌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은 뒤집혀야 하고, 뒤집힐 수 있다. 현대의 '현실주의자를 위한 유토피아'에서 몇 안 되는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생명력은 소름끼치고 위험하며 잠재적으로 파국을 향하는 그 흐름을 뒤집으려는 투쟁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제임스 퍼거슨이 「분배정치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대의 정치'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긍정적 통치의 도전, 즉 사람들을 특정 프로그램으로 집결시키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실험에 착수하도록 할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들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도전할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던 경우를 연상시킨다.

그렇다. 그간 사람들의 손을 맞잡게 했던 공동체들을 찾아나서 그것의 의미를 되새겨 인류 전체의 손을 다시 맞잡게 할 더 큰 공동체의 원리로 발명된 기본소득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어 가는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질적 자유를 획득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우리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 볼 만한 거의 유일하게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거의 유일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브레흐만의 표현) 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임박한 파국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적 평등과 실질적 자유를 가져올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의 '창공의 별'이어야 한다. 출발점이기도 해야 하고 도달점이기도 해야 하며, 전략이기도 해야 하고 전술이기도 해야 한다. 기본소득, 여기가 우리가 뛸 자리다.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권정임
BIKN 운영위원,
한신대 전임연구원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권정임/강남훈 저, 『사회경제평론』 31권 3호, 2018.10) 소개

들어가며

오늘날 핀란드를 비롯한 북구국가들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구국가들은 현재 복지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소개하는 논문은 북구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보편복지체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 논문은 2018년 8월 핀란드 탐페레에서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 21세기 복지국가 모색'을 중심주제로 열렸던 BIEN 주최 18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스웨덴 모델', 즉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민당)이 주도했던 스웨덴 특유의 "종합적인 경제-사회 운영 모델"의 일부로 형성되었다. 스웨덴 모델이 창출된 배경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타협이다. 이에 걸맞게 스

웨덴 모델은 "혼합경제"라는 특성을 갖는다. 곧 '생산'에서는 현존하는 "시장경제의 본질적 원리들"을 유지하지만, '분배'에는 "국가"가 "포괄적으로 개입"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현존하는 분배부정의' 또는 '시장을 통한 일차적 소득분배' 자체의 시정이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일차적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 결과 이 복지체제는 "복지국가"라는 "소득재분배 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또한 베버리지 복지모델의 영향 아래,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다양한 사회적 위험, 특히 궁핍(want)의 해소에 둔다. 이를 위한 방대한 복지비용의 조달을 위해 이 체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회적 소득이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 동시에 "완전고용의 달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처럼 노동, 사실상 시장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중심주의적이다. 이는 이 복지체제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가 길드사회주의와 노동중심주의라는 사실의 귀결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스웨덴 국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왔다. 또한 아직까지도 복지체제의 모범적•선구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중심적이며 노동중심적이라는 두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초래된다.

첫 번째 한계는 이 복지체제가 부정의한 분배구조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체제는 재분배를 통해 현존하는 분배부정의를 상당히 완화시킨다. 그렇지만 재분배의 주요 재원이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임을 고려할 때, 분배부정의의 완화효과는 주로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자연자원이나 과학기술,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가치상승처럼 "해당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자원" 곧 공유지(commons)에서 유래하는 '공유지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통한 지가상승이나 과학기술 발전의 독점적 사용에서 오는 이익 같은 공유지 수익은 대부분 지주나 자본가 같은 특정 개인들이 취득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개인소득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공유지 수익은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복지체제가 부정의한 분배구조를 간과한다는 사실은 나아가, 이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가 사실상 심화되어 이 복지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계급 간 힘의 균형을 깨기에 좋은 조건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계는 노동중심주의로 인해 이 복지체제가 과도하게 노동의존적이 되어, 사회경제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 오히려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현존하는 분배부정의' 또는 '시장을 통한 일차적 소득분배' 자체의 시정이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일차적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한다.

어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완전고용정책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생산적 활용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두에게 지속가능하며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 못하다. 나아가 이 체제가 과학기술의 생산적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체제는 생산이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주목표, 곧 '궁핍 방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이는 이 노동중심주의적인 복지체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부정합"함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실업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이 예시하듯,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용계약관계 또한 확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 및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이 논문에서는 마이드너(R. 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첫째, 이 기금안이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첫 번째 한계, 곧 부정의한 분배구조를 간과한다는 한계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중심주의가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 관점에서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때, 새로운 보편복지체제의 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들이 기금안에 있기 때문이다.

2. 마이드너의 기금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금안 기획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으로 인해 고수익 기업들이 취득하는 '초과이윤'(excess profits)에 대한 스웨덴 대기업 노조들의 문제제기다. 이 문제는 1971년의 LO 총회에서 제기되었고, 1973년 마이드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책임자로 일해 줄 것을 LO로부터 요청받았다.

마이드너는 기금안의 목적으로 초과이윤 문제의 해결 외에도 재산분배의 균등화 및 경제 민주주의, 곧 자본소유에 대한 임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생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증대를 설정한다. 사실 후자 두 가지가 그의 기금안의 주목적이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한 고수익 기업의 초과이윤 문제를 시정한다는 기금의 목표에 걸맞게,기금의 재원은 '이윤'에서 조달된다. 이에 따라 영리 민간 주식회사 중에서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매해 세전 이윤의 약 20%를 기금에 납부한다. 납부 형태는 신규발행주식 형태다. 이처럼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형태로 기금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식 소유가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과 경제전반에 대한 광범한 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목적에서 마이드너는 각 기업이 납부한 주식을 노동자 집단 전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지분소유도, 개인적 배당도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권력관계의 재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형성과 투자 증대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제시했던 기금안의 전제들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금은 해마다 증대해 가는 주식소유를 통해, 무엇보다 재산과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수익의 사용과 관련하여 마이드너는 기금수익의 약 절반은 신규주식의 구매를 위해, 나머지는 교육, 연구사업, 노동조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 같은 노동자 집단 전체를 위한 사업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 제한하여 고찰할 때, 기금안의 이러한 시도는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시정 또는 보완이다.

기금안은 1976년 6월 L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렇지만 국민 다수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실현되지 못한다.

기금기획이 실패하게 되는 '이론적 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금이 지배하는 기업과 시장 경제 간의 원리적 상충문제다. 기금지배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극대화 외의 목적들은,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개별기업의 생존원칙이 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은 기금안이 제시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기금안이 제시하는 재산분배의 균등화 및 경제 민주주의 방식은, 임노동자들 또는 그 대변자들에 의한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독점이다. 이때 기금안의 수혜자가 이처럼 임노동자들만으로 국한된다는 점, 그것도 개인배당의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집단적 수혜의 형태로 제한된다는 점은, 기금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낮았던 근거의 하나로 보인다.

세 번째 요인은 초과이윤과 관련된다. 초과이윤을 측량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초과이윤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는 저수익 기업들의 과소이윤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국 차원에서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는 연대임금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초과이윤'이 그렇게도 문제라면, 연대임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다.

기금안의 이러한 난점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마이드너의 기금안이 그가 비그포르스(E. Wigforss)로부

기금안의 이러한 난점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마이드너의 기금안이 그가 비그포르스(E. Wigforss)로부터 계승하는 길드 사회주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에 기초하며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터 계승하는 길드 사회주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에 기초하며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그포르스의 사민주의 사상의 근본전제는 노동중심주의다. 이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비약하여, 노동을 모든 성원이 나누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회를 노동 또는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원의 권리와 의무, 특히 '소득'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 역시 노동에 연동하는 노동중심주의적인 편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노동중심주의에 일관되게, 그의 경제정책과 구상은 콜(G. D. Cole)을 비롯한 영국의 길드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전개된다. 길드 사회주의적인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는, "산업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치적 결사체"가 "주권을 행사"하고 "일반적인 정치적 문제들과 거시경제정책 영역에선 민주화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중권력체계"다. 그렇지만 이때 국가가 노동자들의 자치적 결사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체계는 사실상 노동/노동자 중심의 체계다. 이런 측면에서 길드 사회주의의 근본전제는 노동중심주의다. 이 체계에서 노동자와 그를 보완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궁핍' 타파를 위한 복지 수혜자는 될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권리'는 갖지 못한다.

마이드너의 기금안은 비그포르스의 이러한 길드 사회주의적인 구상이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금안이 제시하는 경제의 핵심적 조직형태가, 거시적인 경제의 조정과 보편복지의 관리와 집행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국가의 지원 아래 자본의 집단적 소유를 매개로 운영되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길드 사회주의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로부터 기금안의 살펴본 난점들이 파생된다.

첫째, 비그포르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드너 역시 '시장경제'를 수용하지만, '길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일관된 경제운영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살펴 본 첫 번째 난점, 즉 기금지배기업과 시장 경제 간의 원리적 상충의 원인이다.

둘째,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중심주의로 인해 마이드너는 완전고용정책을 전제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와 자주관리를 주장한다. 이는 기금안이 재산분배 균등화에 기초한 경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순되게도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난점의 근본원인이다. 노동자가 아닌 시민들이 배제되면서,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경제적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회수는, 모든 이윤의 원천을 오직 노동으로 볼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중심주의에서 파생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중심주의 및 길드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이념의 영향이 스웨덴 모델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창출을 주도한 중심세력이 강력한 노동조합조직과 사민당 정부 간의 "이중권력체계"라는 점, 완전고용정책과 노동중심주의적인 보편복지체제 등이 그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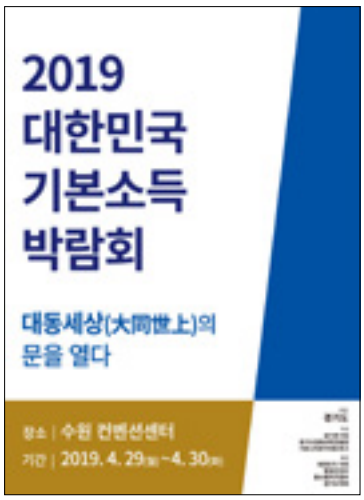
엄밀히 고찰할 때 기금안은 특히 '사회화'와 관련하여 경쟁했던 스웨덴 사민주의의 두 정책 프로그램 중 패배했던 프로그램의 부활이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비그포르스적인 노선과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칼레비(Karlevy)적인 노선으로 분기된다. 스웨덴 모형은 후자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양 노선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기본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새로운 보편복지체제의 전망 창출: 공유 주식자본을 중심으로

기금안의 대안,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모형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은 사회를 노동 또는 노동자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자로서의 전체 성원의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나 반스(P. Barnes)나 스탠딩(G. Standing)이 제안하는 공유부 기금에 주목한다. 특히 미드(J. Meade), 바루파키스(Y. Varoufakis), 라이트(E. O. Wright)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공유 주식자본'(Commons Capital Stock)안을 기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유 주식자본은 공유부 기금의 한 부문으로, 주식을 상장할 때 납부되는 특정 비율의 주식자본과 법인세를 대체하여 지불되는 기업의 신주로 조성된다. 총자본이 공유 주식자본으로 전환되는 상한선은 총자본의 50%다. 공유 주식자본에 대한 배당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공유 주식자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안이 어떻게 마이드너의 기금안의 이론적 약점을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면관계 등의 이유로 생략하고자 한다. 대신 졸고를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작년, 즉 2018년 8월 25일에 BIEN 주최 18차 국제학술대회에서 BIEN 공동창립자 중의 한 분이며 현재 영국 런던대학 SOAS 교수인 스탠딩이 이 글의 발표 후에 했었던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스탠딩에 따르면, 마이드너는 말년에 스탠딩과 친하게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마이드너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자주 표명하였다고 한다.

기금안의 대안,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모형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은 사회를 노동 또는 노동자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자로서의 전체 성원의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이관형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사전 만찬이 열리는 수원의 호텔로 향하는 길,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박람회 포스터와 엠블럼 기가 내걸린다. 거리의 분위기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기본소득의 나라라는 느낌이다.

박람회 하루 전인 4월 28일(일) 저녁 만찬이 열린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해외 및 국내 초청연사, 행사를 준비한 경기도•경기연구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하 '도', '연구 원', '네트워크')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만찬이 끝난 후, 지구 및 한국네트워크의 참석자 간 담소의 시간을 가진다.

4월 29일(월) 행사장인 수원컨벤션센터. 센터는 수원의 강남인 광교신도시 한복판에 자리한다. 신도시답게 고층건물이 즐비하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해외초청 인사들은 숙소에서 컨벤션센터로 이동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산업화된 대도시의 전형을 접하는 느낌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른 시간인데도 행사장에는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센터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홍보 및 지역화폐전시회, 부대행사 등이다. 이 중 네트워크에서는 컨퍼런스 참여는 물론이고 기본소득 홍보관도 운영한다. 축제 성격의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일반적인 컨퍼런스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지만 컨퍼런스는 다른 행사와는 독립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컨퍼런스의 공식명칭은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The 1st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이다.

첫날인 29일에는 개막식, 도지사연설, 기조연설, 기본소득 실험사례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회의실 안팎에는 수용인원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듯하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 안팎을 오가는 진행요원 등으로 북적인다.

이재명 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의 정신에 따른 기본소득의 도입필요성을 역설한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비 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경제정책)이라는 이중 적인 의미를 지님이 드러난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결합함으로 써 청년복지정책인 동시에 소상공 인 지원정책이 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의 환영사, 원혜영•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 감의 축사에는 공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긴다. 잔치에 와서 재를 뿌리는 사람은 없으니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볼 수도 있으나 여러 인사들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가능성'과 관련하여 희망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막식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선언은 눈여겨 볼 만하다. 35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애니 밀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와 기본소득 지급의 다섯 가지 원칙을 자신의 가정사 및 실존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함으로써 공감을 자아낸다. 그는 기존의 다섯 가지 지급원칙 이외에 "무차별적(undifferentiated)"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동일한 금액 지급'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었으나 이를 명시적인 원칙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은 민주주의와 공동선의 정치를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말한다. 빤 빠레이스가 말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자유(real freedom for all)'라는 표현 대신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real democracy for all)'라는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부자와 엘리트에 의해 '포획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자원들의 분배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액수를 가짐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후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실질적인 1인1표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여러 나라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사례 발표와 토론이 전개된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세션1에서는 성남과 경기도, 핀란드의 사례를 논의한다. 기본소득과 일자리 정책의 차이가 언급된다.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싸고는 신중론과 시급론(?)이 동시에 나타난다. 신중론은, 기본소득이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충분한 실험과 결과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본소득이, 나온 지 50년이 되도록 실험만 하다가 사실상 실행되지 못한 부의 소득세(NIT)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시급론)도 나온다.

첫째 날 '세션 I. 실험 및 실행사례(1)' 토론 모습

첫째 날 '세션 II. 실험 및 실행사례(2)' 토론 모습

애니 밀러가 주재한 세션2에서는 인도의 시킴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위스 라이나우에서의 실험사례가 소개된다.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실험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 인도에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삼는 정당이 출현한다. 바르셀로나 총선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장악한다. 스위스는 2017년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채택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는 일상적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투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두 개의 트랙이 진행된다. 트랙 1은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이며, 트랙 2는 "기본소득 일반: 이론 및 최근 흐름"이다. 트랙은 각기 3개의 세션을 포함한다.

트랙 1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채택한 것이 주된 논의거리가 된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현금지급이 원칙이고 청년의 입장에서도 현금이 더 선호된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목표에는 청년 복지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 양자의 결합은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지역화폐는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효과를 입증한다.

둘째 날 트랙 1 '세션 I.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토론 모습

둘째 날 트랙 1 '세션 II.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토론' 모습

둘째 날 트랙 1 '세션 III.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토론 모습

둘째 날 트랙 2 '세션 III. 기본소득: 법제, 사회적 가치' 토론 모습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도 큰 이슈이다. 현재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은 사실은 '농민수당', 더 나아가 '농가수당'이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정치•사회적 명분을 바탕으로 실행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별이 필요한 기존의 농민수당, 농가수당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보편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하늘, 공중으로 표현되는, 용적률을 통한 재원마련방법이 제시된다.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배당권으로 '경기도 신탁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이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고, 공유지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모두" 기본소득 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로 만들어 정권교체 후에도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랙 2에서는 먼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공급의 양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난한 이를 위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도, 경제의 침체 내지 축소 가능성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경우 기존의 조세시스템으로는 세금부과가 힘들기 때문에 공유지분권, 디지털 커먼스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빅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즉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유지분을 요구하고 고정지분을 획득하는 이중적 소유권(배당권)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젠더평등을 앞당기는 방법임이 제기된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위상과 의미를 정치적 권리가 공유부에 대한 만인의 몫에 기초한 경제적 보장과 함께할 때만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리고 그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구상이 가능하다는 토마스 페인의 생각으로부터 찾는 주장이 제기된다.

끝으로 기본소득이 지니는 법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에 따라 법제화 방안과 주무부처가 달라진다. 각각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를 잘 헤아려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공진화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 영역에 '사회적 가치세'를 신설하여 부과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람회 관람객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인원 3만 명에 달한다. 컨퍼런스의 경우 개막연설을 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를 포함한 연사는 총 37명이다. 첫날인 29일은 대략 2천여 명이, 둘째 날은 세션별로 1-2백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공동주관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구네트워크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적절한 참가자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한 여러 단체들 간의 의견조율과 합의 도출도 쉽지 않았다.

기본소득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먼저, 전체를 조율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컨퍼런스의 성격 및 구조와 관련해서는 담론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적, 정치적, 정책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누구나에게 버팀목과 시작일 수 있길

김민정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에 작게나마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기본소득과 나'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사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하거나 커다란 담론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조금 덜 불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10년 뒤늦게 간 대학의 어느 수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학과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내용과 그 속에서 가사노동과 함께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언급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사노동'과 '기본소득'의 연결은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스치듯 나오고 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들은 기본소득이 당시의 저에게 잊혀 질 수 없는 '반짝반짝'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별 것 아닌 것으로 다시 잊은 채 살던 제가 기본소득을 다시 만난 것은 2012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고 권문석 동지를 처음 본 날이자, 마지막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나눈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도 희미한 날이지요. 그때 팀별로 나누어 각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옆의 그룹에서 '기본소득'이란 말이 저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 저거 나 들어본 건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권문석 동지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특정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 날은 제가 권문석 동지를 기억하는 하나의 기억이고, 제게 다시 기본소득이 들어와 자리 잡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만나길 바랐던 시간이기도 했지요. 그럴 수 없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뒤 저는 지금에 오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보지 않았던 대학을 결국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늘 임금노동을 해야 했던 시간들. 지금도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위해 임금노동을 멈추기는 어려운 상황과 최저임금으로 이어나가는 활동들. 아빠를 부양할 수 없고 그가 여전히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부채감. 자립할 상황이 되지 않아 엄마가 경험하는 폭력 속에서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자책하던 시간들. 돈이 없어서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잠만 자던 어떤 시간들. 지금도 저는 기본소득을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저의 과거의 경험들로 소급 적용해보곤 합니다. 기본소득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모든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른 선택들이 가능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은 될 것이란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며 '사회운동'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엄청나게 휘감고 있던 부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저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돈을 벌고 착한 딸로 살면 그래, 내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겠지. 나는 죄책감으로 괴롭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러지 못하는 현재에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만나고, 활동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방향을 바꾸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속에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지 않는가, 왜 국가는 나에게 착한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가. 왜 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운동을 하며 누군가를 부양하지 못한다는 부채감을 지녀야 할까. 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 될까. 왜 우리는 더 나은 지금을 꿈꾸는 게 사치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 말이죠.

요즘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승전 '기본소득'이 되곤 합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처럼 만사오케이 해결책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얼마나 내가 처절한가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되는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다는 것은 당장 오늘을 어떻게 버텨가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의 불안을 조금은 걷어 가고, 다른 상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모든 이들이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는 구성원이고, 마땅히 존중되어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앞으로의 기본소득운동이 더 많이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하는 지역에서 임금노동으로 하는 운동단체, 정당활동, 기본소득 활동과 함께 주요하게는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는 페미니즘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고, 그립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대안적 인식론으로서 여성주의는 기존 사회의 궤도 밖에 존재하면서도, 사회의 궤도 수정을 돕는다. 인식 방식을 기존의 언어 질서 외부에서 찾는다. 선택지 밖에서 선택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회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우리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시간에 페미니즘적 인식론과 기본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당신과 나, 우리의 삶에 기본소득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자, 오늘의 나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바라며,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나

이선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십 수 년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이십대에는 교육민주화 운동에 얼쩡거렸다. 삼십대에는 어린이도서관 운동에 나름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사십대에는 그냥 생업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방구석에 유폐되어 있던 나를 '기본소득'이 세상으로 끌어내었다. 그냥 앞으로의 세상이 궁금했다. 산업혁명은 다수 농민, 수공업자의 삶을 위협했다. 그들은 러다이트 운동 (일명 기계파괴 운동)으로 저항했으나 총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농민, 수공업자들은 모두 굶어죽지 않았다. 그 전에 없었던 수많은 공장의 노동자로, 사무직 노동자로 자리바꿈하여 오늘을 살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기반 카풀 택시에 맞서 택시 노동자들이 연일 분신으로 저항하고 있다. 몇 세기 만에 또 다른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저항하기 보다는, 발 빠르게 변신해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弱인공지능'일 때의 이야기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인간보다 월등한 '强인공지능'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처럼 기계식, 암기식 일만을 로봇이 대처하리라 생각했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일은 인간 고유의 일로 남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는 로봇의 등장은 과연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남아있을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뭘 하고 살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놀고먹지'였다. 과거 노예제 시대에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전담하고, 노예주들이 놀고먹고, 즐기고 다른 여타의 활동을 했던 것처럼 로봇을 노예삼아 우리 사람들도 놀고먹는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았다. 과거 노예주들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할 로봇이나 AI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로봇과 AI는 구글, 페이스북

등 막강한 21세기 자본이 앞장서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준비하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의 끝자락에 만나게 된 것이 '기본소득'이다. 누구나, 개별적으로, 조건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기초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유토피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과연 순순히 자본가들이 내놓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기본소득' 공부를 통해서 자본가들 스스로도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단지 거지처럼 구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미 기여하고 있는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근본적으로는 모두의 것이었기에 모두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 덕분에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나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금비(금요일엔 Basic Income – 현금이 비처럼 온 세상에 골고루 내리도록 하자.) 독서모임을 열어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서 기본소득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 기본소득 운동 관련 성명서도 쓰고, 그걸 셀프로 알 리기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록도 하고, 난생처음 ppt자료도 만들어 기본소득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과거 어린이도서관 운동을 할 때도 그랬다. 대부분은 무지, 무관심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 이전 선배 운동가들의 헌신이 씨앗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 후 많은 이들이 함께 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은 질적, 양적 성장이라는 환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지금 기본소득 운동 역시 이미 씨앗을 뿌린 이들이 있다. 이제 물을 주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지금은 열매도, 화려한 꽃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여름이 지나 수확의 계절 가을이 곧 올 것은 분명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땀 흘릴 수 있으리라.
많은 이들이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해서, 난 다시 방구석으로 들어가도 될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A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핵심적인 우려이며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말리브 해변에서 서핑하는 한량들의 게으름과 무임승차에 대한 보상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 만큼 기본소득의 지지자들도 다양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세상에는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많은 일과 활동이 있습니다.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돌봄노동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유급노동 종사자가 의존적이며 무임승차입니다. 생의 과정에서 한 순간도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일은 가치가 있고, 우리 모두는 사회의 부를 공유할 자격이 있는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유급노동만이 유일한 노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바닥'(floor)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좋은 삶'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의미 있는 '다중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도, '평등한 기회'를 활용하여, 잠깐씩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노동조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과 조건을 이용하여 새롭고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사회투자적 성격을 가진 '적극적' 복지의 한 형태이며, 근로의욕을 억제하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현 복지체계의 함정(trap)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과연 게으름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문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슬로건은 수많은 생산노동자가 필요하던 완전고용 시기의 신화(myth)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층적으로 분절되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나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징벌적이고 훈육적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괜찮은 일자리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는 일부에 불과하며, 일과 노동의 경계 역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더 많은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도 충분한 여가와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게으름이 가능할 때 노동을 '하고 싶은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동기가 제공되며,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때 게으름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축소될 것입니다.

이 비판과 반론을 실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민컴(Mincome) 실험과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나미비아 실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노동의 양을 축소하는 사람도 일부 관찰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돌봄, 다른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위해 유급노동을 축소한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 실험의 결과는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나태해지거나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낡은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좋을 삶'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입니다. 그 발판은 '노동윤리'에 기초하거나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득하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기본소득

2019 여름

창간호 #001